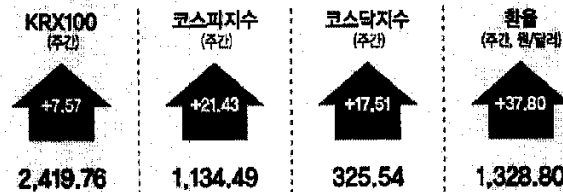


NEWS SUMMARY

2008.11.10

자산운용협회 홍보실



유가증권시장 주간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증권상용거래소 제공: 11.3~7일)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사모펀드	통금저축	연기금	자산운용	기관계	외국인	개인	기타
매도	1,069	6,391	4,795	4,749	880	6,841	33,483	58,207	59,701	217,068	6,958
매수	1,125	7,782	4,944	5,554	275	8,239	36,882	63,601	52,318	219,737	6,073
순매수	57	1,391	149	806	▽605	1,397	2,400	5,393	▽7,382	2,679	▽885

주간 외국인-기관 매매동향

(기관)

종목	금액	종목	금액
삼성전자	1,491	현대차	774
현대모비스	1,308	LG전자	554
KB금융	977	하이닉스	542
삼성테크윈	844	GS건설	502
SK물류	631	현대제철	363
신한지주	479	LG화학	293
한국전력	417	SK에너지	278
KTF	320	기아차	250
현대해상	269	POSCO	182
삼성전기	254	현대건설	172
CJ제일제당	211	삼성중공업	160
신세계	201	현대중공업	158
현대상선	197	두산인프라코어	136
대한해운	164	한화	117
삼성SDI	158	LG디스플레이	114

(외국인)

(단위: 억원, 기간: 11.3~7일)

종목	금액	종목	금액
LG전자	572	삼성전자	3,050
GS건설	523	현대모비스	1,419
동양제철화학	490	KB금융	1,114
LG디스플레이	457	삼성중공업	682
삼성물산	246	SK물류	601
LG화학	208	한국전력	380
한진중공업	156	CJ제일제당	382
우리투자증권	141	KTF	340
삼성테크윈	125	삼성생명	240
LG물류	109	POSCO	233
한솔제지	101	삼성SDI	215
삼성증권	101	현대차	214
하이닉스	95	대우조선해양	187
LG	95	현대해상	188
한국가스공사	92	두산중공업	136

코스닥시장 주간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기간: 11.3~7일)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사모펀드	통금저축	연기금	자산운용	기관계	외국인	개인	기타
매도	51	96	223	74	28	372	1,267	2,114	3,074	53,720	680
매수	59	167	223	47	41	378	863	1,778	2,056	55,033	608
순매수	8	69	0	▽27	13	7	△405	△335	△1,018	1,312	28

펀드·보험 불완전 판매 발 못붙인다

‘적합성 원칙’ 따라 금융사가 정상판매 입증못하면 투자손실 배상해야

반토막 펀드로 대규모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손해배상의 주된 쟁점은 ‘불완전 판매’인데 현행법에는 소비자가 이의 입증책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펀드뿐 아니라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 피해구제 시스템이 소비자에게 한층 유리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적합성 원칙’이 담겨 있는데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 중 변액보험에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면 금융회사들은 투자자의 소득·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아울러 적합성 원칙하에서는 현재 소비자에게 있는 불완전 판매 입증책임이 펀드·보험상품 등의 판매회사로 넘어가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도 손실금액이 최소 기본금액이 되는 등 현재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9일 금융당국과 유관 협회는 내년 2월 적합성 원칙에 앞서 세부 투자운용 준칙을 만들고 있다. 초안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시 해당 판매·금융사는 줄소송으로 인해 파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 투자자·상품 5등급으로 나눈다=자통법에 의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 받는 금융상품은 각종 펀드와 머니마켓펀드(MMF), 추가연계펀드(ELF)뿐만 아니라 장내의 파생상품을 비롯해 주식·채권 등까지 광범위하다. 최근 입법예고된 보험업법이 시행돼 변액보험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면 내년부터는 원본손실 상품의 상당수가 강화된 소비자 보호 규정하에 놓이게 된다. 적합성 원칙은 자통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4일 판매되는 금융상품부터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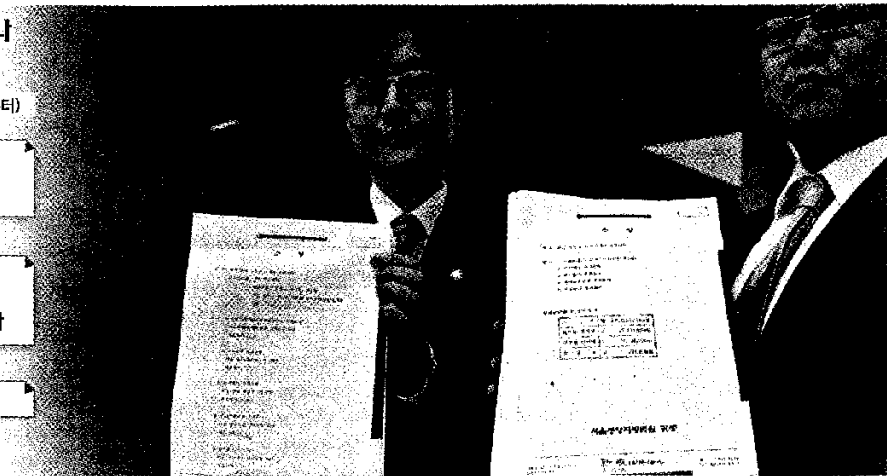
보편적 투자상품인 펀드의 경우 현재 금융당국 등이 마련하고 있는 적합성 운용 준칙을 보면 투자자와 상품을 철저하게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펀드를 판매할 때 금융 및 판매회사는 설문지 등을 통해 고객을 5단계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1단계 위험회피, 2단계 안전형, 3단계 안전성장형, 4단계 성장형, 5단계 공격형 등이다. 아울러 펀드 상품도 이에 맞춰 5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해 성향에 맞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펀드·변액보험 ‘불완전 판매’ 어떻게 바뀌나

- ‘적합성 원칙’ 전후 비교 -

현재	구분	시행후(내년 2월4일부터)
의무아님 (비 강제규정)	투자자의 소득 투자경험에 적합한 상품판매 의무	의무화 (강제규정)
소비자 (투자자)	투자손실시 손해배상 입증책임	1차: 판매회사 (은행·증권사) 2차: 자산운용사
미 규정	손해배상 추정액	투자손실분

※변액보험 판매시 ‘적합성 원칙’ 시행일시는 아직 미정



내년부터... 2010년엔 원본손실우려 모든 상품에 적용 줄소송으로 망하는 금융사도 나와 영업환경 급변할듯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 분석 결과 2단계 안전형이란 상품도 반드시 2단계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등급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했다면 적합성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2단계 투자자가 권유한 상품 대신 5단계 공격형 상품을 원한다고 해서 그냥 판매해서는 안 된다. 준칙에 따르면 투자자가 등급에 맞지 않는 상품을 고집할 때도 “안 맞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주식·채권·변액보험도 적용, 앞으로 추가 확대=펀드가 아닌 일반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도 적합성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들 상품 역시 투자경험·위험성호도·투자예정기간 등을 고려해 고객에게 가장 맞는 상품을 권유하고 팔아야 한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펀드 등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적합성 원칙 준칙 초안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펀드처럼 등급을 나누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주식투자의 경우 안전형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벤처 등 고수익·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는 것이 골자다.

자통법에서 제외되는 보험상품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변액보험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변액보험에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게 되면 펀드처럼 불완전 판매에 따른 입증책임을 보험 판매회사가 진다.

◇불완전 판매 피해구제, 어떻게 달라지나=적합성 원칙이 시행되면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도 현재와 판이하게 달라진다. 소비자는 분쟁조정 기관이나 법원에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를 봤다고 이의제기나 소송을 하면 된다. 소비자 본인은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대규모 손해배상으로 망하는 회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에 앞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한 국가들을 보면 소비자 보호 강화 외에도 금융상품 판매에 적잖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위

용어설명

◇적합성 원칙(suitability)=금융회사가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일반소비자(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과거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묻지마 판매’ 식으로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투자손실이 나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고객알기제도(KYCR-Know-Your-Customer-Rule)라고도 한다.

원칙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보다 1년 앞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한 일본은 상품판매시간이 평균 2~3시간으로 길어졌다. 또 일반 소비자에게는 리스크가 큰 상품은 아예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적합성 원칙 도입 이후 펀드 판매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70% 수준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적합성 원칙을 시행한 후 다른 상품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는 원본 손실 우려가 있는 보험 금융 등 모든 상품에 대해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기자 fjb@sed.co.kr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이상훈기자 flat@sed.co.kr

‘적합성 원칙이 지난해에만 시행됐더라면...’

불완전 판매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지켜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적합성 원칙이 포함된 자본시장통합법이 좀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사정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쉬운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작년에만 실시됐어도...”

반토막 펀드 가입자 탄식

반토막 펀드 소송 이면에는 은행 증권 판매회사 등이 펀드 등을 팔 때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묻지마식 불완전 판매’를 했던 것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 실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파워인컴펀드처럼 투가적 성격이 강한 장외파생상품 펀드를 일반 소비자에게 팔기도 했다. 적합성 원칙

업계 등 반대로 실시 늦어져

일은 우리보다 1년앞서 도입

을 적용하면 파생상품 펀드는 개인이 아니라 금융정보에 정

통한 기관 등에 주로 판매해야 한다.

자산운용협회의 한 관계자는 “적합성 원칙이 담긴 자본법이 지난해 시행됐더라면 불완전 판매 자체가 크게 감소했을 것”이라며 “아울러 거래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금융회사가 생겨나면서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이 대중화된 것은 지난 2005년. 2007년 말에는 펀드 가입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서면서 가장 보편적인 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2005년부터 해마다 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적합성 원칙’은 업계 등의 반대로 시행이 늦어졌다.

자본법은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2006년 말 입법예고됐다. 정부는 당시 입법예고에서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합성 원칙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자본법 시행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우여곡절 끝에 3년 뒤인 내년 2월4일로 확정됐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보다 1년 앞서 적합성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행시기에 있어 한국이 주요 국가 중 늦은 편”이라며 “자본법의 여러 쟁점사항을 놓고 국회 등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선진국은 원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품에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배기자

■ 보험·증권업계 반응

“금융상품시장 크게 위축”

당혹속 “독소조항” 반발

내년부터 도입되는 ‘적합성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험사와 증권사들은 당혹스러움과 동시에 금융상품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뜰이나 최근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고 이에 따라 금융사와 고객(투자자) 간 분쟁 기운이 고조되는 와중에 새로운 규정이 시장의 불안함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들은 우선 새로운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투자자의 성격과 투자 패턴 등이 다양한 한데 5가지로 단순 분류돼 투자자가 어떤 한 등급으로 정해질 경우 그 등

“획일화된 투자로 오히려 역효과”

일부선 “전문성 높아질것” 기대

급에 의해 획일화된 투자 방법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 응대 시간이 길어져 다른 투자자에게 충

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이른바 ‘상담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해당 금융기관으로서는 사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엄격한 투자등급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으로’ 투자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오히려 박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회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지금보다 투자자에게 더욱 불리한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생·사보 간 교차판매로 변액보험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있을 수 있다”며 “변액보험 상품구조를 제대로 모르는 설계사가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통 생보사들은 상품비중 중 변액보험이 20~30%를 차지하며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 70%를 넘는 게 일반적이다.

생보업계에서는 “일본의 경우 보험시장에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면서 분쟁신청 건수가 대폭 늘었고 대리점이 크게 줄어드는 등 채널 변화가 나타났다”며 “이는 결국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보험산업이 퇴보할 수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B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고객들이 무리하면서까지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는다”며 “투자형 상품에 적용해야 할 적합성 원칙을 모든 상품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속에서도 일부에서는 새로운 조항 도입과 함께 금융사들의 상품 판매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C보험사의 한 임원은 “적합성 원칙이 변액보험에 적용될 경우 보험사가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만큼 불완전 판매 해소에 대한 보험사들의 전문교육과 시스템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이상훈기자 flat@sed.co.kr

주식형 펀드 시장 크게 위축 3분기 계좌수 72만개 감소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3분기(7~9월) 주식형 펀드 계좌 수가 72만 개 감소하고 설정된 펀드 수가 줄어드는 등 주식형 펀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9일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해외 주식형 펀드 계좌 수는 1745만2569개로 집계됐다. 6월 말 1817만282개에서 71만7713개 줄어든 수치다.

월별로는 7월과 8월에 각각 19만5284개와 17만6587개의 계좌가 감소한 데 이어 9월에 34만5842개 줄어 8월에 비해 감소 폭이 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판매 채널별로 은행에서 56만5461개의 계좌가 감소했으며 증권사와 보험사에서 각각 13만9654개, 1만4964개가 줄었다.

펀드 계좌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설정된 주식형 펀드 수도 줄어들어 10월 말 기준 1387개로 9월에 비해 11개 감소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머니투데이

2008년 11월 10일 월요일 026면

최근 일부 신탁펀드가 투자한 사업에서 불법 자금유용, 횡령 등의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신탁펀드란 부동산, 금, 석유, 영화, 와인 등 각종 신탁자산 또는 이들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크다.

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0억원 규모의 '블리스 아울렛특별자산'을 설정한 블리스자산운용은 최근 이 펀드가 투자한 업체와 소송에 들어갔다. 사업주가 펀드 투자자금을 불법 유용해 손실을 볼 위험에 처해서다.

이 펀드는 의류 재고처리 전문 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수익금을 나눠 갖는 구조였지만 사업주가

펀드자산 불법유용·횡령 피해 속출

신탁펀드 '주의보'

1차 투자자금인 20억원가량을 불법으로 유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모펀드인 이 상품은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를 담당했으며 만기는 내년 1월이다.

펀드가 만기를 코앞에 두고 소송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은 수익금은 물론 원금 일부를 떼일 위기에 놓였다. 블리스자산운용은 투자자금 회수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판매보수 등 비용이 지급된 상태라 투자자들로서는 원금 전액을 회수하기란 어렵

다는 지적이다.

블리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불법 유용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발했으며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1월 만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원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M자산운용이 지난해 설정한 신탁펀드도 최근 투자업체 관계자가 펀드자산을 수백억원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펀드는 해외 리조트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부동

산펀드로 연기금과 금고 등 기관 투자자가 대거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신탁펀드의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것은 상품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판매사와 운용사가 사업 타당성 검토나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펀드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신탁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사업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중단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충고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불법 유용이나 횡령 등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변수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n@

급등락 경기 여파 실물펀드도 '희비'

선박펀드, 선박산업 침체로 원금손실도 우려
와인펀드, 와인 가격상승과 환차익으로 '대박'

대내외적인 경기침체 여파에 따라, 실물 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실물펀드들의 명암도 엇갈리고 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해운산업이 부진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 선박산업에 투자하는 선박 실물펀드도 직격탄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하나UBS운용의 '하나UBS세계선박특별자산2' 이 펀드 평가 금액의 경우 37억 8875만원의 17.21%인 6억 5222만원이 상각된 것으로 공시된 것.

지난 2005년 5월 3일에 설정된 '하나UBS세계선박특별자산2' 펀드는 4년 만기 폐쇄형으로, '세계로 선박사업' (제 2호)의 권리에 투자하면서 연 7%규모의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용됐었다.

그러나 최근 선박을 대어해왔던 'C&라인' (구 동남아해운)이 10일자로 운항을 중단한데 따른 임금 체불로 직원들이 법원에 선박 압류신청을 내며 불뚝을 맞았다. 무엇보다 'C&라인'은 근래 유동성

부실로 워크아웃설이 나왔었던 C&그룹의 핵심 계열사인데다, 전반적으로 해운업 상황이 워낙 안 좋아 원금에 대한 손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UBS운용 관계자는 "내년 5월 만기까지 자금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 등 최선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박펀드가 이처럼 관련 산업 부진으로 악화일로로 걷는 가운데, 최고급 와인을 구입해 5년 가량 보관한 뒤 되팔아 수익을 내는 실물형 와인펀드의 경우 대박 사례를 보여 주목된다.

그 주인공은 한국운용이 지난 6

월 2일 설정한 '한국사모보르도파인와인2호'.

한국운용측에 따르면, 설정액 21억 규모인 이 펀드는 와인가격 상승 가치와 최근 원-파운드 환율 급등 수혜로 설정 5개월 만에 27%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국운용측은 "최근 와인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한국사모보르도파인와인2호'의 경우 현지통화인 파운드화를 바꿔 보관하던 중 환차익으로 추가 수익까지 얻게 됐다"며 "설정 당시 5년 만기 폐쇄형이었지만 고수익을 실현함에 따라, 일부 와인의 경우 청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intimes.com

한국경제

2008년 11월 08일 토요일
A17면

해외주식펀드 한달만에 순유입

금리인하 등 힘입어 환매액도 크게 줄어

해외 주식형펀드에 약 1개월 만에 자금이 순유입됐다. 글로벌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환매 금액도 크게 줄고 있다.

7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해외 주식형펀드에 45억원이 순유입됐다. 해외 주식형펀드로 자금이 순유입된 것은 지난 10월 7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8일부터 이달 4일까지는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금이 빠져나가 8654억원이 순유출됐다. 더구나 비과세 및 세제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돼 지난 달 말에는 하루에 1000억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미니 펀드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각국 정부가 금리를 내리는 등 금융위기 수습에 적극 나

서면서 해외 주식형펀드의 환매금액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하나대투증권 서경덕 펀드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면서 친디아 중국 브릭스 등 지역펀드의 자금유출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반등장에 대한 기대심리로 환매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신흥시장으로 확산된 데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이 추세적 반등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신흥시장펀드 투자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반등장을 활용해 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원 기자 twkim@hankyung.com

증시침체 불구 사모펀드 순자산 소폭 늘어

올들어 19% 증가... 공모펀드는 26%나 줄어

증시 침체로 공모펀드의 순자산총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데 반해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및 큰손 고객들의 보수적 투자가 순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공모펀드의 순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222조7,698억원에서 지난 5일 기준 164조9,640억원으로 25.95% 감소했다.

반면 사모펀드 순자산총액은 95조6,507억원에서 114조3,199억원으로 19.52% 증가했다.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맡겼는데 순

●공모 및 사모펀드 현황 (단위:억원)

구분	08.11	07.12
공모펀드	1,649,640	2,227,698
사모펀드	1,143,199	956,507
전체	2,792,839	3,184,205

※자료:자산운용협회

자산총액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사모펀드 운용성과가 훨씬 좋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원인은 뭉치돈이자 기관 자금이 많은 사모펀드가 특성상 주로 채권형과 혼합형 등에 몰려 있기 때문이

다. 최근일 기준으로 공모펀드는 전체 설정액 227조원 중 주식형펀드가 130조4,123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데 비해 사모펀드는 118조 중 주식형은 고작 9조원으로 8%에 불과하다.

반면 채권형과 채권혼합형은 각각 25조831억원, 18조5,985억원으로 전체의 36%에 달한다.

자산운용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대부분인 공모펀드는 주식형이 큰 비중을 차지해 증시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기관과 자금 규모가 큰 개인이 대부분인 사모펀드는 안전성이 뛰어난 채권의 비중이 높아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자산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fist@sed.co.kr

테마펀드 수익률, 시장 평균보다 낮아

올 들어 하락장에서 각종 테마펀드들이 시장 평균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설정액 50억원 이상인 국내 공모주식형 420개 중 최근 6개월 수익률 순위에서 IT(정보기술)주 금융주 등 섹터펀드와 우선주, 지주회사, SRI(사회책임투자)기업 등에 특화된 테마펀드들이 최하위권으로 처졌다.

코스피지수가 본격적으로 하락 반전한 지난 5월 초 이후 '한화우선주포커스1C'는 -42.87%로 가장

성적이 나쁘다. 기술주에 투자하는 '하나UBS IT코리아1C'는 -41.46%, 지주사 또는 지주사 전환 예정 기업에 집중하는 '하이지주회사플러스1C'은 -40.63%로 모두 4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다.

'탐스아름다운SRI주식1A'(-38.11%) '기온SG그랑프리포커스금융주식'(-39.38%) '유리웰스중소형인덱스C'(-39.38%) 등도 이 기간 국내 주식형 평균(-34.99%)에 미치지 못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稅 혜택 장기투자펀드 투자자들 반응 '싸늘'

'디스커버리' 등 판매 미미

정부의 펀드 세제혜택 발표 이후 장기투자펀드가 잇달아 선보이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 우려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세제혜택이라는 당근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1~2년간 투자자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신규 계좌 제한으로 가입할 수 없었던 이른바 '원조' 디스커버리·인디펜던스 펀드의 문을 다시 열었다. 이전에는 기존 가입자만 추가 불입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신규 계좌를 만들어 투자가 가능해진 것.

실정액 증가가 주춤하면서 나온 고육지책이지만 한때 펀드 투자자 사이

에서 '신화'로 불렸던 상품이고 장기투자시 세제혜택과 함께 높은 투자수익도 올릴 수 있는 대표 펀드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장기 회사채펀드도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한국투신운용 등 운용사들이 출시한 상품을 비롯, 현재 판매가 예정된 것까지 합하면 10여개에 달한다. A등급 편입 채권이라는 안정성과 세제혜택 등을 무기로 투자자 유인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판매실적은 미미하다. 펀드 세제혜택 자체가 급작스럽게 나온 정책인데다 글로벌 신용위기로 기업들이 휘청대는 상황에서 회사채펀드가 인기를 끌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자금이 가장 많이 모였다는 '푸르덴셜 장기 회사채'에도 고작 18억원이 들어왔을 뿐이다. /이상훈기자 lhk@sed.co.kr

매일경제

2008년 11월 10일 월요일 A26면

중동펀드 변동성 커 조심해야

펀드투자 가이드

지난해 신흥시장이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좁혀잡기 어려운 펀드가 많이 등장했다.

EMEA 역시 그중 하나로 동유럽·중동·아프리카를 의미한다. 통상적인 중동펀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러시아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중동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펀드가 나왔지만 이후 저조한 성과를 보이면서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에서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걸

쳐 있는 80여 개 국가에 투자하는 만큼 분산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있다. 닉 프라이스 피델리티 EMEA주식형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발달 정도가 다른 다양한 국가가 포함되어 있어 변동성이 큰 장세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의 근거에는 이들 국가의 증시 하락이 내부보다는 외부의 문제로 시작됐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EMEA 펀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유동성 등에서 제약이 많아 대부분의 상품이 두 국가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최근 금융위기 와중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주요 기업

들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며 은행들의 부실 가능성이 그닥 높지 않고 아프리카의 관문으로서 성장성이 높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러시아는 올 들어 가장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곡물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된 데다 그루지야와 전쟁으로 정치적 불안감이 가중된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외환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1998년 당시와 달리 전반적인 상황이 양호하다는 것이 피델리티운용의 평가다. 프라이스 매니저는 "펀드 멘털과 무관한 매도로 저가 매수 기회"라며 "곧 주가가 반등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의 특성상 변동성이 크고 그만큼 위험도 높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정욱기자

맞춤 재테크 | 주가 떨어져도 이익 나는 펀드 없나요

엠브렐러 펀드, 상승-하락장서 모두 수익 가능

Q 현재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면 펀드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주가가 떨어져도 손실이 적게 나거나 수익을 내는 펀드는 없을까?

엠브렐러 펀드 내 리버스 펀드 수익률

펀드	수익률(%)	
	6개월	1년
한국투자자산배리어리버스인덱스파생A-1	55.6	-
푸르덴셜트리엠브렐러BEAR인덱스파생1	50.4	61.6
하나금융엠브렐러리버스인덱스파생K-1	49.3	59.0
대신TARGET엠브렐러리버스파생상품1	44.0	56.8
삼성리버스인덱스파생상품 1	43.8	52.5
마이베어마켓파생1Class e	43.7	53.9
하이엠브렐러리버스인덱스파생상품	41.1	52.4
국내 주식형펀드 평균	-38.6	-45.4

7월 기준.

자료: 펀드존

“
 환매 수수료 따로 부담 없이
 하락기엔 리버스펀드 전환
 ”

남편의 소득은 은행예금 등 안전자산에 저축하고, 아내의 소득으로는 주식형 자산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박모 씨 부부(30대 후반·맞벌이).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펀드가 있다고 들었다”며 상담을 요청한 박 씨 부부에게 필자는 ‘엠브렐러 펀드(umbrella fund)’를 추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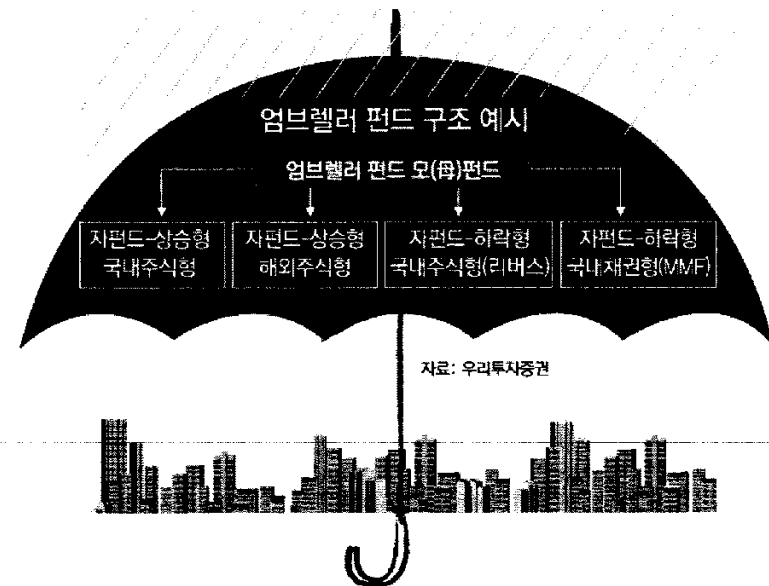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 139조 원 규모의 주식형 펀드는 이른바 ‘불(bull) 마켓형’ 펀드다. 즉 주가가 올라야 수익이 나는 펀드로 올해처럼 주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엠브렐러 펀드를 이용하면 주가 상승기와 하락기에 모두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 펀드는 각각 다른 특성의 자(子)펀드가 하나의 세트에 묶여 우산처럼 생겼다고 해 엠브렐러 펀드로 불리며, 자펀드 간에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

즉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국내 증시전망이 좋으면 자펀드 가운데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해외시장이 좋을 때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이 다시 안 좋아지면 리버스 펀드(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나는 펀드)나 채권형 펀드로 손쉽게 투자 전환을 할 수 있는 ‘세트 상품’인 것이다. 마치 우산 속에서 소나기를 피하듯, 주식시장 하락과 같은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일반 주식형 펀드는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증시가 급변해 환매를 하면 수익의 50~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 펀드는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다른 자펀드로 전환할 수 있다.

엠브렐러 펀드 내 리버스 펀드를 이용하면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리버스 펀드는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선물 매도계약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가 하락기에 이익을 낸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료: 우리투자증권

코스피는 6개월 동안 -38%의 손실을 기록한 반면 리버스 펀드는 평균 46%의 수익을 냈다.

박 씨 부부처럼 주가 하락을 예상한다면 엠브렐러 펀드 내 리버스 펀드에 투자하다가, 다시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면 상승형, 주식형 펀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펀드 간 전환은 가입 회사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통해 1년에 12번까지 가능하다. 최근에는 전환횟수의 제한이 없는 펀드도 출시되고 있다. 편입된 자펀드의 종류는 국내 주식형, 리버스형, 채권형은 물론 브릭스(BRICs) 등 각 자산운용사 상품

에 따라 다양하다.

엠브렐러 펀드는 투자자 본인이 주가 상승과 하락을 예측해야 한다. 그만큼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자칫 시점을 잘못 잡아 갈아탈 경우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증시가 하락할지 상승할지 예측하기 힘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엠브렐러 펀드 내 한 방향의 펀드에 투자금을 ‘몰빵’하기보다는 기존에 투자해 온 주식과 펀드의 위험분산 차원에서 엠브렐러 펀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말기아빠의 편재테크” 저자)

정리=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FUND

해외주식형 수익률 6주만에 올라

러시아·인도 20% 꺾춤... 국내주식형은 0.35% 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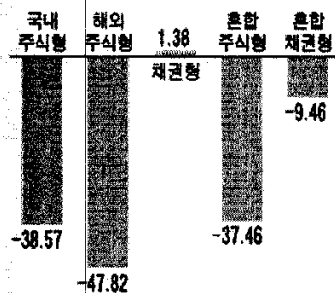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지난주 중반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 완화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서 해외 주식형 펀드는 6주 만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9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 543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0.3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0.67% 상승했으나 주식형 펀드의 투자 비중이 높은 대형주가 0.51% 하락했기 때문이다.

주요 펀드 중 삼성그룹주 펀드들의 선방이 눈에 띄었다. 주간수익률 4.23%로 수익률 1위를 차지한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주식 1클래스A'를 비롯해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주식 1(A)'(3.60%) 등이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대형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는 상대적으로 탄탄했음을 보여준다.

중소형주 펀드와 배당주 펀드가 오랜만에 이음값을 했다. SH자산운용의 'Tops Value주식 1A'(2.65%),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주식 1'(2.10%), '신원밸류고배당주식 1C

유형별 6개월 평균 기준가격
동락률 (단위=%)



4'(1.86%) 등의 수익률이 높았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 호재로 인한 글로벌 증시 상승으로 주간 평균 수익률 7.24%를 기록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3개 주요 글로벌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7.76%를 기록했다.

신흥국펀드(117개)는 13.01%, 유럽신흥국펀드(24개)는 19.54%의 성과를 거뒀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작용으로 러시아 증시가 급등하면서 러시아펀드의 수익률이 20.96%에 이르렀다. 인도

펀드도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19.54%의 높은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브라질펀드 역시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11.15%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이 밖에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유럽 주식펀드(7.83%), 금융위기에 대한 안도감이 증시를 상승으로 이끈 일본 주식펀드(4.10%) 등도 모처럼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등의 투자 공약을 내건 버락 오바마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에너지섹터펀드(23개)가 주간 12.45% 수익률을 올렸다. 그러나 중국펀드(95개)는 상하이 A지수와 H지수가 경기 둔화 우려와 비유통주 물량 부담 등으로 약세를 보여 국가별로 가장 낮은 0.63%의 수익률을 올리는 데 그쳤다.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주식형자1(CLASS-A)'펀드가 30.71%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하나UBSEasternEurope주식자1CLASSA'펀드가 29.77%로 뒤를 이었다. 에너지섹터펀드 중에선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주식종류형자1-A'펀드가 주간 14.28% 수익률을 올렸다. 김동은 기자

국내 증시가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기침체 '이중고(二重苦)' 속에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매일 널뛰는 장세를 맞아 단기차익을 노리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증시 주변에서는 '비이성적 장세'를 맞아 싸우기 보다는 2~3년 후를 내다 본 긴 호흡으로 업종 대표주나 자산주 등을 공략하는 '가치투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고작 1배에 불과한 상황에서 낙폭이 큰 업종 대표주들이 준비해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적기라는 지적이다.

5년전으로 돌아간 증시... “가치투자 해볼만”

◇ 지속되는 변동성 장세= 이달 들어 잦아들 것만 같던 증시 변동성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신영증권이 지난달 국내 증시 변동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0.05%의 확률이 현실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판을 쳤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달 들어서는 변동성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많았다. 하지만 미국 대선 전후로 나타난 증시 급변동성은 단기 투자자들이 지난달에 느낀

● 장기투자할만한 안정적인 가치주

종목	이자보상 배율	자기자본 비율	PBR
현대차	11.4	61.0	0.6
GS칼텍스	19.8	79.5	0.9
호남석유화학	84.4	80.1	0.5
고려아연	14.9	64.7	0.7
세이베스틸	10.7	62.7	0.8
한일시멘트	194.8	84.9	0.5
고려제강	360.8	83.1	0.6
한진중공업홀딩스	28.5	71.3	0.4

※ 자료: 신영증권

PBR 1배로 추락... 자산가치-청산가치 비슷 “길게 보고 투자할 낙폭 큰 업종대표주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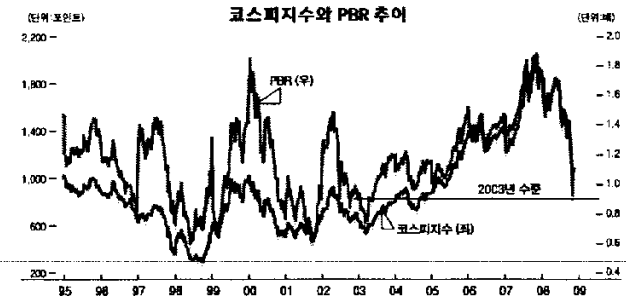
스트레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이달 들어 20% 가까이 폭등했던 코스피는 지난 6일 단 하루 만에 7% 넘게 빠졌다. 이튿날인 7일에도 지수의 일중 변동폭이 8% 가까이 차츰 등 여전한 리스크 장세가 지속됐다. 이 같은 극도의 불안정성은 코스피지수가 최근 저점(장중 890포인트)까지 다시 추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섰던 증시에 뛰어들 경우 언제든 지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 증시 PBR 2003년 수준= 약세장 속에서 급변동을 거듭한 국내 증시의 PBR은 현재 자산가치와 청산가치가 비슷한 1배 수준까지 미끄러졌다. 지난달 말에는 지수급락으로 1배 이하로 추락하기도 했다.

이는 2003년 하반기 수준으로 지난해 1.8배까지 차츰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현재 국내 증시 PBR은 코스피 지수가 1,050포인트에 달할 때 1배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과의 PBR 비교를 하면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중보 하나다투증권 연구원은 "자수가 종목 이상의 급변동성을 보여주는 비이성적인 장세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기업가치를 훨씬 밑도는 우량주들이 많아졌다"며 "작어도 2~3년 동안 긴 안목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길게 보고 투자할만한 가치주 준비= 현재 국내에서 방어적인 안정성이 돋보이는 가치주



와 함께 비정상적인 급락으로 시가총액이 순현금보다 낮아진 종목들도 유망하다는 지적이다. 신영증권은 이자보상배율과 자기자본비율과 사총대비 순현금비율이 높은 안정적인 가치주로 현대차·GS칼텍스·호남석유화학·롯데제과·고려아연·롯데칠성·고려아연·세이베스틸·고려제강 등을 꼽았다. 물론 이 같은 조건을 제쳐두고라도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업종 대표주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치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경수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거 IMF 이후의 가치주 투자의 성과를 볼때 다시 한번 가치투자의 끈을 잡을 수 있는 시기"라며 "증시가 여전히 실업음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펀더멘털 대비 가격 하락이 커진 종목들은 장기투자를 시작할만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코스피 하루변동폭 큰 이유는

개인비중 커져 '심리적 쏠림' 심화 기관 매수세 취약...수급공백 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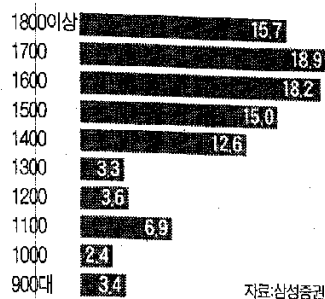
국내 증시의 출렁임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내릴 때는 물론 오를 때도 코스피지수의 몸놀림이 가벼워진 이유는 무엇보다 수급상의 공백이 크고 심리적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지수의 장중 변동폭은 평균 60.52포인트에 달했다. 100포인트가 넘는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던 한 주전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내 증시의 일중 변동성은 아시아 증시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금단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2~3년간의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1300선 이하에서 거래된 물량 비중이 가장 낮다"며 "이는 적은 물량에도 아래위로 지수 변동폭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 증권사에 따르면 올 들어 900~1300선 사이에서 거래된 주식 비중은 연간 거래량의 1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연구원은 "거래가 뜸한 상황에서 개인과 외

유가증권시장 지수대별 거래비중
(단위:%) *올 들어 11월7일 까지



국인의 투매가 지수 낙폭을 키웠던 것처럼 반등 국면에서는 매수 세력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진 점도 변동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내 개인들의 매매비중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66.6%에 달한다.

지난달 중순 40%대로 낮아졌던 개인 비중이 한 달도 채 안 돼 급격히 늘어났다. 박석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는 심리나 분위기에 편승하는 경향이

높아 지수 등락에 따른 쏠림현상이 심해지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반등을 예상하고 저가 매수에 나선 '스마트머니'의 유입은 반등 시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전까지는 단타매물로 나올 수 있어 주가변동폭을 키울 것이란 분석이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취약한 것도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잦아들고 기관들도 간간히 매수에 가담하면서 수급구조가 개선되고 있지만 기관들이 아직 적극적인 '사자'에 나서지는 않고 있어 지수가 밀릴 때 하단을 받쳐주는 힘이 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한 차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신용유자 잔액이 급감하는 등 증시를 둘러싼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되고 있어 향후 증시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돈 풀리는데...내년 유동성 장세 올까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해 글로벌 금리 인하 공조로 7일 코스피는 42포인트 넘는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상당수 증시전문가들은 실물경제 침체에 발목이 잡혀 향후에도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는 기대해볼 만한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스글로벌 금리 인하 △기업이익 하향조정 과대 반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 정책에 대해 주가 선반영 △투자심리 개선 등이 더해지면 내년에 큰 폭 반등을 노릴 만하다는 시나리오다.

우선 글로벌 금리 인하 효과만으로 단기적으로 30~50% 오르는 반등장세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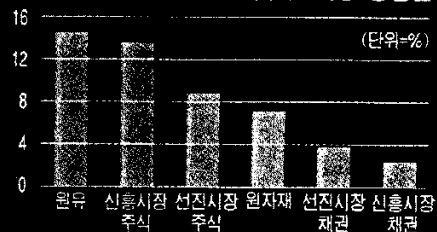
이경수 토러스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스피가 정상적인 주가 수준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1350선 회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금리 인하 효과로 1540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금리 인하에 따른 총통화(M₁) 증가량이 7000억달러가 넘으며 신흥증시 쪽이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데다 원화유동성 경색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증시 상승이 기대된다는 논리다.

대표적 비관론자인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전 저점을 다시 타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경기가 안 좋아도 내년 1분기께 금융위기가 완화된다면 전 세계에 풀린 유동성이 주가가 많이 낮아진 주식시장으로 몰려 단



통화 증가에 따른 자산시장별 예상 상승률



*자료=토머스데이비스트림, 토러스투자증권

갈 곳 없는 돈 증시 이동엔 팽리 가능성

"경기 회복 확실한 징후있어야" 신중론도

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운용사 본부장들도 유동성의 힘으로 지수는 일정 수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정원 삼성투신운용 주식운용 본부장은 "향후 금융시스템 정상화와 함께 금융위기 전 지수대인 1500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운식 ING자산운용 본부장은 "1350선까지는 실적 악화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힘이 시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비해 김영일 한국은행 주식운용본부장은 "유동성 팽리에는 한계가 있어 경기가 회복되는 내년 하반기에야 완만한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을 폈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유동성에 의한 상승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유동성 장세에서 경기회복의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다시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주가는 다시 주저앉고 말 것 이란 얘기다.

이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외환위기 때도 1998년 10월부터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올랐으나 경기(펀더멘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00년 이후 서서히 하락했다.

다만 오바마 정권의 정책 방향이 가시화되고 산업 구조조정 방침이 정해지면 증시가 앞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더글라스 안 UBS증권 전무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반등도 빠를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경기가 확실하게 반등하는 지표들을 확인해야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

스트는 "미국 경기를 약 10개월 선행하는 잉여유동성 지표와 주택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2분기 이후에야 경기는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 규제 등이 더해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지난해처럼 대출을 통해 투자에 나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다.

이하나·정욱 기자

매일경제

투신, 3주만에 순매수

지난주 투신이 3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연기금과 함께 주요 매수 세력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신은 지난주(11월3~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2399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 기간에 3조3482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지만 3조5882억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연기금(1397억원)이나 증권사(1391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순매수한 것이다.

투신권은 지수 급락이 가속화된 지난달 중순부터 주간 기준으로 순매도를 지속해왔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최저 892에서 최고 1158까지 18.57%나 급등한 한 주 전(10월27~31일)에도 관망세를 유지하며 1054억원어치를 순매도했었다.

조용식 곳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주식형펀드에 대한 환매 요구가 수그러들었고 반면 저점 매수를 노리는 신규 자금 유입은 늘어나면서 투신사들의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6일까지 1145억원의 신규 자금이 국내 주식형펀드로 들어왔다.

한편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은 지난주 삼성전자를 1491억원어치 순매수하는 등 현대모비스(1398억원) KB금융(977억원) 삼성테크윈(644억원) SK텔레콤(631억원) 신한지주(479억원) 한국전력(417억원) KTF(320억원) 등을 집중적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외풍에 떠는’ 국내 증시

대외요인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외환위기 전에는 50% 남짓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90% 이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대외요인은 외환위기 전이나 후가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성장률 및 주가 변동에서 차지하는 해외요인의 비중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세계요인과 아시아 역내요인 등 대외요인의 주가변동에 대한 기여도는 90.8%”라고 밝혔다.

주가변동 기여도
대외요인 90.8%

외환위기 이전에는 50.4%에 불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전에 주가변동에서 차지하는 세계요인은 4.5%에 불과한 반면 아시아 역내요인과 자국요인은 각각 45.9%와 49.6%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세계요인

기여도는 54.1%로 큰 폭 상승한 반면 역내요인은 36.7%로 낮아졌고 자국요인은 9.2%로 급락했다.

이에 대해 송준혁 KDI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의 통합화 및 개방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외요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변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대외요인 영향은 외환위기 전이나 후가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열 기자 toolsie@

머니투데이

신용으로 주식사기 더 힘들어진다

미래에셋, 신용공여기간 90일로 절반 줄여

미래에셋증권이 오는 17일부터 신용공여자와 주식담보대출의 신용공여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미래에셋에 이어 다른 증권사도 동참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개인투자자

들이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게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증권은 9일 신용공여자와 주식담보대출, 주식형 소액자담보대출의 신용공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공여나 주식담보대출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만기를 늘리더라도 90일 단위로만 연장할 수 있다. 신용공여자의 경우 변경안이 17일 결재분부터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13일 용자매수 체결분부터 대상이 된다. 또 만기연장은 온라인이나 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의 리스크 노출기간을 줄여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고 설명했다. 최근 상당수 증권사들이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책정해 신용공여 가능 종목을 줄이는 가운데 이처럼 공여기간까지 축소할 경우 신용공여자는 훨씬 어려워지게 된다. /최수문기자 chem@sed.co.kr

파이낸셜 뉴스

롤러코스트 장세 ELS투자 불안

(주가연계증권)

지난달 주가연계증권(ELS)이 '겨우' 2800억원어치 발행되는 데 그쳤다. 9월 발행 규모가 8800억원으로 지난 2006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단위 ELS 발행액이 1조원을 밑돈다고 했는데 10월 폭락장을 거치면서 규모가 재차 대폭 줄어들었던 것.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지난달 27일 장중 890선을 저점으로 1200선까지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증권사들이 ELS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아직 자금 유입은 미미한 수준. 지난달 거의 모든 원금 비보장형 ELS 상품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한 데다 개별 종목이 아닌 코스피200 지수마저 가격제한폭을 오르내리자 전문가조차 선뜻 투자를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10월 2800억원 발행 그쳐... 신상품은 속속 출시 투자심리 개선안돼 청약금액 미달 발행 취소도

■ELS '신상품' 속속 선보여
대거 원금손실로 상품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았던 ELS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불안한 증시를 반영하듯 원금 보장형을 내세우는가 하면 기초자산도 코스피200 지수나 삼성전자, 포스코 등 시가총액 10위 내 종목뿐이다.

현대증권은 원금보장형과 비보장형 상품을 하나씩 같이 내놨다. 기초자산은 코스피200지수와 LG전자·포스코 등이다. 우리투자증권과 한화증권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동양증권증권 장지현 연구원은 "아직까지도 비보장형 ELS가 더 많이 발행되고 있지만 지난 3개월간 원금보장형 ELS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현 지수대에서는 원금손실 부담은 덜한 상황이지만 좀더 안정적인 상품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수익 구조는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수익률도 높아졌으며 원금비보장형의 경우 원금손실이 가능한 낙인배리어가 50%선까지 대폭 낮아졌다.

삼성증권이 내놓은 코스피200과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낙인배리어가 50%다. 즉 기초자

산이 기준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원금과 연 19.02%의 수익률로 돌아온다. 동부증권 ELS 제66회의 낙인배리어는 55%다.

■금동락 장세에 투자해도 될까

코스피지수가 2005년 5월 수준으로 뒷걸음질치면서 그 이후 발행됐던 대부분의 ELS가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ELS가 지금 불능 사태를 맞은 것도 ELS의 신뢰에 점진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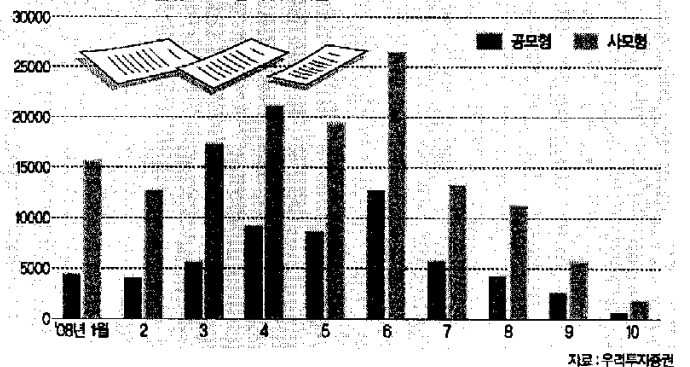
이런 이유로 반등장세에서도 아직까지 자금 모집 성적은 좋지 않다.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라도 지금 투자할 경우 코스피지수가 500선만 지켜도 원금과 일정 수익률은 보장되었

지만 ELS에 대한 투자심리는 쉽사리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말 다시 코스피지수가 급락하는 등 요동치면서 전 저점을 뚫을 수도 있다는 공포는 여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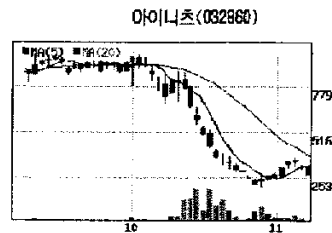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원금비보장형인 한국투자증권 590회, 교보증권 282회, 유진투자증권 94회, 대우증권 2817회, 우리투자증권 2247회, 하나대투증권 45회 등의 청약금액이 최저한도에 미달해 발행이 취소됐다. 원금보장형인 한화증권 ELS 67호, 한국투자증권 591호, 하나대투증권 48회에는 지금 이 소폭 유입됐다.

hug@innnews.com | 안상미기자

2008년 ELS 모집규모 현황 (단위: 억원)



2008년 11월 10일 월요일 022면



CB 전환청구권 행사 물량 폭탄 코스닥 상장사 '전전공공'

코스닥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물량 증가로 올상이다.

전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유동물량 증가 및 연이은 매도세로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CB가 물량증가 및 주가급락을 부추기는 폭탄으로 작용한 셈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날 들어 전환청구권행사를 공시한 기업은 7개사.

아이니츠 및 바론손, 스카이뉴판, 신지소프트, 지엔코, 굿센, 자강 등이 주인공. 이 중 3개사를 제외한 4개사가 전환청구일에 주가가 내림세를 나타냈다.

또 지엔코, 굿센, 자강 등 전환청구일에 주가가 상승했던 상장사들

도 이후 4~13% 내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아이니츠는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최근 전환청구권이 행사돼 266만 1413주가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5, 6일 각각 47만 2440주, 218만 8973주가 주식으로 변경돼 증시에 유입됐다. 이에 따라 주가는 지난 6일 12.86% 떨어지는 급락세를 나타냈다. 바론손은 전환청구권 행사로 5137만 2261주가 주식으로 바뀌어 증시에 풀렸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바론손 주가는 이날 13.98% 내리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외에 신지소프트는 지난달 31일과 5일 전환청구권 행사로 총 19만 8412주가 증시로 유입되며 하락세를 보였다.

또 자강이 지난 3일 전환청구권 행

사로 149만 6234주가 주식으로 전환돼 증시에 풀린 후 다음날 4% 하락하고 지엔코 및 굿센 등 2개사도 전환청구권 행사 후 4~13% 급락하는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명동사채시장으로 유입됐던 CB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주식전환돼 증시에 풀려 매대로 이어지며 연이은 주가하락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 대표는 "자금난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이 발행한 CB가 사채시장으로 유입되고 그 물량이 현재의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증시 분위기가 흉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always@fnnews.com | 안현덕기자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최근 특허 취득에 대한 공시를 내면서 내심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인데다 특허를 통해 기술력도 인정받은 것이라 당연히 증권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공시 발표 당일 주가는 오히려 전날보다 더욱 하락했다. A씨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석도 안통하는 코스닥 투자자·애널리스트 혼란

금융시장이 진화하고 특이나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밀어닥치면서 과거 상식으로 통하던 투자 방법은 더 이상 증시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가치 투자를 부르짖는다고 해도 회사의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일쑤라 기업을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이를 보고서를 통해 기업을 가늠해보는 투자자들도 혼란스럽기만 하다.

올해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B업체. 전부 증시 상장 철회를 하는 와중에도 곳곳이 코스닥에 입성해 제법 잘 견디고 있는 편이지만 최근 전년보다 2배가량 늘어난 영업이익 실적을 공시했음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자 크게 낙심했다. 주가가 상승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락 폭을 크게 늘려서 예전보다 주가가 더 빠졌다. 실적이나 회사의 미래 전망 등에 기반한 가치투자라는 원칙이 빛을 잃은 것이다.

투자의 정석처럼 여겨지는

'저PER(주가수익비율)' 투자도 더 이상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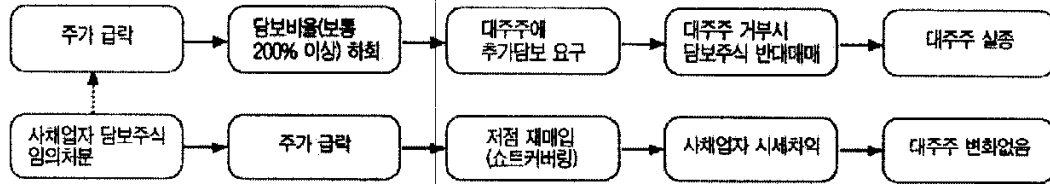
워런 버핏과 같은 큰손 투자자는 저PER 종목에 투자하고 장기간 기다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은 그럴 만한 인내심도, 자금력도 없다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저PER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지만 자금처럼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저PER 기업이 속출하게 되며 한창 증시가 활황으로 치달던 지난해에도 일부 저PER 종목들은 오히려 더 주가가 하락했다"면서 이러한 투자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오전장과 오후장이 급변하고 주가가 어디로 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원칙마저 빛을 잃어 투자자들만 이래저래 혼란을 겪는 혼돈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much@fnnews.com | 한민정기자

사채업계 담보주식 반대매매 흐름도



사채업자들, 대주주 담보주식 대거처분 “상장사 100여곳 적대적 M&A 노출”

공매도후 저가 매입 - '쇼트커버링' 으로 시장불안 가중

금융위기 속에 사채업자들이 코스닥 대주주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받은 담보주식을 대거 시장에 내놓고 있어 시장 불안요인을 가중시키고 있다. 담보주식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는 급락하고, 대주주가 실패한 코스닥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일부 사채업자들은 담보비율에 여유가 있어 담보처분권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담보주식을 대량으로 판 뒤 주가가 급락하면 되사오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한 뒤 저가에 되사들이는 '쇼트커버링'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사채업자들은 더 많은 차익을 얻는 반면 소액주주들은 급등락의 원인도 모른 채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했던 지난 달 초부터 명동 사채업계를 중심으로 반대매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상장사 2곳을 인수한 A씨는 지난달 반대매매를 당해 보유지분이 모두 없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타법인출자 공시 이후 급락세를 탔던 B사도 사채업자의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대주주 지분이 사실상 증발된 상태다.

사채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대매매로 사실상 대주주가 사라진 회사가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족히 100곳은 넘는다고”며 “많게는 수백곳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주인 없는 기업이 급증한 탓에 정상적인 인수·합병(M&A)은 급격히 줄어들고 적대적 M&A를 노린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 당국도 지난달 반대매매가 쏟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상장사들에 대주주 주식 담보거래와 관련한 ‘5% 지분 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돌려기도 했다.

사채업자들이 ‘공매도 쇼트커버링’ 방식으로 매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다. 코스닥의 C사가 대표적인 의심 사례다. 이 회사는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하한가 11차례를 포함, 17거래일 연속 급락하며 순식간에 89%나 폭락했다. 15일께 대주주 담보주식 300만주가량의 반대매매가 소화됐지만 하한가는 멈추지 않았고 28일부터는 사채업자들의 재매수가 의심되는 거래가 폭발하며 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난달 별다른 이유 없이 9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다가 이를 연속 상한가로 급반전한 D사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담보주식들 가운데 한 종목이 폭락해 원금 손실이 우려되면 담보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일단 처분하는 것이 사채업계의 관행이어서 이 같은 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는 지적이다. 사채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하는 기업들이 넘쳐나자 처분권이 발생하지도 않은 담보주식을 일단 팔고보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담보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주가는 폭락하게 마련이어서 저가에 주식을 되사는 사채업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앞서 큰돈을 벌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감사 결정 등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담보주식을 처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이거나, 주가 급락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차거래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채업자들의 이 같은 매매는 해당 대주주들도 통상 사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대주주 지분변경이나 최대주주 변경사실이 제때 공시되지 않는 실정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사채업자들의 담보지분 임의 매매는 시세조종이나 내부정보 이용, 공시 위반 등의 위법 혐의가 있다”며 “즉각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긴 힘들지만 앞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대형 증권사 실적난 가중

대우증권 4년만에 적자전환

대우증권이 4년 만에 적자 전환하는 등 대형 증권사들의 실적난이 가중되고 있다.

9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2008사업연도 2·4분기(7~9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마이너스 261억원과 17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우증

권의 분기 손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4년 3·4분기 이후 처음이다. 적자전환의 가장 큰 요인은 금리 급등으로 인해 채권 평가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규모는 약 7조원으로, 2분기 평가손실만 7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그동안 국고채와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졌던 은행채 보유비중이 높아 타 증

권사 대비 채권 평가 손실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실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래에셋의 2분기 영업이익은 295억원, 당기순이익은 173억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62%, 70%, 전년동기대비로는 72%, 79% 하락했다. 2·4분기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이 6조3,000억원으로 전기대비 14% 줄어들면서 대형 증권사들의 위탁 매매 수수료 수입도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혜진기자 hiesim@sed.co.kr

‘이름값’ 못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골드만삭스·피델리티등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 ‘평균 이하’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국내 전체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자산운용사(합작법인 제외) 중 연초 이후 수익률이 국내 주식형펀드 평균보다 나은 운용사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 1개에 불과했다. 외국계 운용사 중 순자산규모가 가장 큰 PCA투신운용을 비롯해 세계적 명성이 있는 JP모건, 피델리티, ING, 프랭클린템플턴 등도 국내 주식형펀드만 놓고 보면 국내 운용사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

국내 운용사 중 수익률이 가장 뛰어난 한국투신운용(-33.13%)이나 자산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자산운용(-39.06%)와 비교하면 크게는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

개별 펀드로 비교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연초 후 수익률이 비교 가능한 46개 펀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주

● 외국계 자산운용사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 (단위:억원, %)

운용사	순자산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연초후
골드만삭스운용	120	-16.43	-27.66	-39.05	-38.51	-37.50
일리안츠운용	1,062	-17.88	-28.45	-38.44	-46.19	-40.83
슈로더운용	100	-18.61	-26.24	-38.18	-44.92	-41.21
JP모건	850	-19.86	-34.66	-45.27	-47.52	-41.39
PCA운용	10,340	-17.48	-28.22	-39.66	-46.70	-41.47
프랭클린템플턴	3,753	-19.38	-28.92	-41.28	-49.27	-42.27
도이처운용	89	-17.20	-26.30	-41.10	-47.73	-43.26
피델리티운용	3,894	-18.26	-30.57	-43.48	-51.21	-44.11
ING운용	5,390	-19.33	-30.30	-41.79	-49.22	-44.96
전체	471,398	-17.28	-27.94	-39.62	-46.94	-40.27

*합작사 제외

자료:제로인

식형펀드 유형평균(-40.27%)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둔 펀드는 5개에 불과했다. 순자산규모가 가장 큰 ING1억만달러주식1'이 마이너스 46.21%로 하위권에 처했고, 국내 운용사였던 적이 없는 순수 외사 펀드 중 규모가 제일 큰 '피델리티코리아주식형자'펀드 역시 수익률은 마이너스 44.24%에 그쳤다. 연초 잠깐이나마 수익률 상위권에 있었던 'JP모건JP코리아트러스트주식종류자'(-41.75%)나 외국계

펀드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프랭클린템플턴그로스주식형1'(-41.89%) 등도 국내펀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JP모건자산운용의 경우 해외펀드인 'JP모건러시아주식종류형자1A'의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75.81%로 국내 실정된 순자산 100억원 이상 해외 주식형펀드 중 수익률이 가장 나쁜 불명예를 안았다.

/이상훈기자 flat@sed.co.kr

외국계증권사, 해고 칼바람 분다

골드만삭스·메릴린치 지난주 10여명씩 감원

고객명단·회사 자산 못 빼가게 불시에 통보

외국계 증권사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난 7일 출근하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해고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자신의 회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가운데 있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갑작스러운 통보에 적지 않게 당황했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외국계 증권사의 특성상 고객명단이나 회사 자산 등을 빼가지 못하게끔 해고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린 것이다. 그나마 출근을 저지당하고 사물을 택배로 전해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어지면서 외국계 증권사의 서울지점들도 감원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본사의 위기와 중시 약화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 주말 1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대부분 주식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주니어급 딜러로 지난주 중반 애널리스트 3명을 내보낸 데 이은 추가 감원이다. 이 회사의 애널리스트 숫자는 절반으로 줄었다. 골드만삭스 관계자는 "전 세계 지점의 직원 10%를 줄인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직원 규모는 100여명이다.

메릴린치도 최근 10여명의 직원을 내보냈고 크레디스위스(CS)는 주니어급 애널리스트가 최근 회사를 나갔다. 네덜란드 라보뱅크는 서울지점의 파생사업 부문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계 증권업계에선 이번 감원 조치를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시니어급 직원을 추가 해고할 것이라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메릴린치도 애널리스트 인원을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도 10명 안팎의 감원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우 기자 hu@hankyung.com

파이낸셜
뉴스

2008년 11월 10일 월요일 002면

퇴직연금도 수익률 악화

13개 증권사 DC형 전부 '마이너스'... 보험사는 양호

미국발 금융위기가 퇴직연금시장에도 파장을 몰고 왔다. 증시침체로 퇴직연금 수익률도 올 들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성과가 좋았던 확정기여형(DC)연금은 올 들어 증시가 폭락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또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금융권 중에는 증시와 밀접한 증권사의 수익률이 더욱 좋지 않았다.

9월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3·4분기까지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수익률은 순해보험-생명보험-은행-증권사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들은 퇴직금이 확정된 확정기여형(DB)에서 전부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다. DC형도 LIG손해보험사만 -1.52%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손보사는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이 중 그린손해보험은 DC형, DB형 모두 2.23%의 수익률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사는 DB형은 모두 플러

스 수익률을 보였지만 DC형은 신한생명(-1.12%)과 미래에셋생명(-2.10%)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가운데 메트라이프는 -6.37%로 수익률이 더 나빴다. 생보사도 지난해 신한생명이 10.13%, 미래에셋생명이 9.14%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저조했다.

은행의 경우 DB형은 주로 수험, 대구,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이 -0.87~-0.08%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고 DC형은 13개 은행 중 7곳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증권사들은 증시침체 타격을 그대로 입었다. 그나마 증권사의 DB형은 은행과 비슷한 수익률을 보였지만 DC형은 13개 증권사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전년도 최고 12.53%의 수익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극명하다.

증권사 퇴직연금운용 관계자는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들의 운용방식은 각기 다르다"며 "따라서 근로자나 기업은 각자의 운용방식에 따라 퇴직연금이 가입해야 한다"고 말

했다.

실제 퇴직연금 운영사 중 가장 안전한 수익률을 보인 보험사들의 운용현황을 보면 90% 이상이 DB형 상품이고 또 이 중 95% 이상을 원리금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를 한다.

은행도 보험사와 같은 운용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증권사는 DC형이 50%가 넘고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 나온 수익률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며 "퇴직연금은 일반 주식이나 펀드와 달리 수십년을 보고 하는 장기펀드 개념"이라고 말하며 지금 나온 수익률 수치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퇴직연금 관계자도 "지난해 가입 고객들의 수익률은 일반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며 "퇴직연금이 시작된 2006년 가입자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없다"고 말했다.

hit8129@fnnews.com | 노현섭기자

은행의 자금줄인 은행채시장이 풀리고 있어도 회사채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었다. 경기둔화와 기업들의 실적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국고채와 스프레드



도 오히려 벌어졌다. 회사채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뿐만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으로 펀드 판매 연기가 있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내렸는데... 반응없는 회사채시장

◇거래 죽고 금리만 뛰어=9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회사채 거래는 3조25억원으로 줄어들어 최대를 기록한 3월 7조2724억원에서 58.7% 급감했다. 6조5200억원까지 늘어난 발행물량도 1조6084억원으로 줄었다. 발행물량을 제외하면 기존 회사채 거래량은 1조원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금리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2차재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8%대를 웃돈다. 국고채 3년물과 스프레드는 3.35%포인트에서 7일 3.51%포인트로 오히려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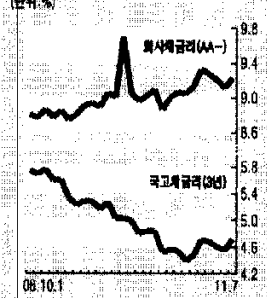
채권업계 관계자는 "300bp(3%포인트)가 넘는 은행채 2년물 스프레드가 지난해 이후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며 "회사채는 높은 금리 탓에 AAA 혹은 신용도가 우수한 AA급만 소량 움직일 뿐 나머지는 '고사' 상태"라고 전했다.

김형호 아이투신 상무는 "현재 시장에는 '사자'가 없어 파는 입장에선 할인해서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매물을 해소하기 위해 가격을 대폭 할인하다보니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성인모 증권업협회 부장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용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신용등급이 높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자금이 막힌 상태"라며 "일부 대기업 채권은 그룹 계열사가 사주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등 정부당국과 연금의 유동성 공급이

국고채금리(3년)·회사채금리(AA-) 추이
(단위:%)



금리 8%대 유지부동
국고채와 스프레드↑

신용좋아도 거래안돼
"채권 안정자금 필요"

신규 물량과 은행채에만 집중된 것도 회사채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상무는 "연기금은 장기투자 성격상 신규 발행물량만 배수하지 경과물(이미 발행된 채권)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또 은행채만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회사채시장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채권시장 안정자금 필요"=전문가들은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당국의 본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형호 상무는 "90년대 20조원의 채권시장안정자금(채안자금)을 만들어 시장을 안정시킨 것처럼 연기

금을 중심으로 채안자금을 만들어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삼성투신 채권운용팀장도 "한국은행이 채안자금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기업어음(CP)을 매입한 것과 같은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원석 삼성증권 채권분석파트장은 "환부(부실기업)를 제대로 도려내지 않으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도 자금이 돌지 않고 있다"며 "구조조정 없이 기업대출을 늘리면 결국 부채가 늘어나고 경기회복이 늦어지면 나중에 더 늘어난 부채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한 회사채형펀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펀드 운용상 기술적인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팀장은 "현재 장내 채권시장에선 100억원 단위로 거래되고 공모 채권형펀드의 투자비중은 종목별 10%로 제한돼 펀드 설정액이 1000억원은 넘어야 채권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회사채펀드 설정액은 10억원이 채 안돼 실제로 채권을 살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 팀장은 이어 "권업비율을 예외적으로 낮춰 소액 거래도 가능하게 하면 회사채시장의 거래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상연·박성희 기자 sylin@



#1. 제주 가두리양식장 사장의 호출. 즉시 서울에서 제주로 날아갔다. 007작전이 따로 없다. "OO 골프장으로 와주게." 도착할 즈음 휴대폰이 울린다. "골프가 끝났어. 사우나에서 만나지." 가운만 달랑 걸친 일동 면담은 매서웠다. "어떤 놈(원드)부터 가지를 쳐야해? 이놈(기존 투자중독)은 영 맘에 안 들어. 하나 새로 골라봐." 사장의 재산 규모(수십 억원)와 산상정보, 투자 포트폴리오가 가득 담긴 노트북이 지르르 열린다. 조직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밤낮없이 작성한 '오직 가두리양식장 사장만을 위한 파일'이 스트르 열린다.

#2. 모 증권사 이모 연구원은 최근 일본 출장에 나섰다. 명색이 VIP고객을 위한 '골프 투어'인데, 골프에는 접해보지도 못했다. 대신 사장을 때리는 집요한 질문에 답을 주느라 오금은 자리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VIP들은 몇 차례 고개를 주억대더니 아내 라운딩에 나섰다. '수십억원이 될지, 수백억원이 될지 모르는 투자 결정은 기다리는 수밖에...' 이 연구원은 홀로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다시 부르심을 앙망하며.



슈퍼 개미를 모셔오라

증권사 연구원(애널리스트) 2인의 '어디든 찾아가는 서비스' 스케줄

K연구원		월 화 수 목 금 토	L연구원	
서울 강남지점 VIP 고객 A씨 가족 대상 하반기 격렷식 투자설명회			강원지역 VIP 고객 기가지호 방문 설명회	
강원 춘천지점 인근 N사 직원 대상 방문 설명회			서울 삼성타운 고객 초청 영화관람 설명회	
서울 강남지점 고객 초청 영화관람 설명회 (상영 전 설명)			서울 호철신라에서 VIP 고객 초청 보유 펀드 전략 설명회	
대구 자산시장 특검 중독 보유 고객 대상 추가 전망 설명회			전남 여수공단 모 기업 임원 대상 설명회	
경남 거제지점 법인고객 N금고 대상 주식 시황 설명회				
			경기 모 골프장에서 강남 의사 모임 초청 설명회	

'슈퍼 개미
(고액 개인 투자
자)'의 입질이 시작됐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물린 일반 개미들
에게 '위기가 기회'라는 투자원칙은 그림의 떡. "못
살겠다"는 아우성의 틈바구니에서 슈퍼 개미들은 은
인자중하며 바이어로 '때(투자시점)'를 기다린 셈이
다. 그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증권사 연구원(보통 애널리스트)들의 발바닥은
땀이 날 지경이다. 까다롭고 철두철미하지만 한번
결정으로 수십억원의 투자자금을 대는 고액 투자자
를 일반 고객처럼 대할 수는 없는 노릇. 산간오지
등 전국 방방곡곡, 술집 사우나 등 장소 불문하고
그들만을 위한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안 가는 곳
이 없다"고 할 정도.

L연구원은 곧 강원도 출장에 나선다. 강원도 전
체를 통틀어 자점이 한 곳밖에 없는 터라. 내친김에
강릉 속초 양양 주문진 등지의 VIP가 부르는 가가
호호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일주일에 평균 두세
번 지방출장을 다녀오거나,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
벽 4시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잔뜩 긴장한 채 지
키노라면 몸은 녹초가 된다"고 했다. 주말엔 골프장
클럽(클럽하우스)에서 1시간 이상 VIP를 위한 즉
석설명회도 마다치 않으니 휴일이 따로 없다.

그나마 설명하는 시간이 낫다. 애써 준비했어도
'한 사람을 위한' 1대 1 맞춤 자료가기 때문에 한
번 쓰면 폐기 처분해야 한다. 더구나 고액 투자자들
은 정보도 빠르고 난도(難度)도 높아 대충 준비했
다간 본전도 못 찾는다.

지방으로 돌아 보니 시간이 뼈대해 본연의 업무
(종목 및 시황분석)도 뒤처지기 일쑤다. 증권사 연
구원이 모르는 내용을 VIP가 알고 있는 경우도 흔
하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정보파트장은 "딜레마
지만 결국 잡 딜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숨죽이던 고액 투자자들 '위기=기회' 기다린 듯 서서히 입질
증권사들, 연구원까지 동원 방방곡곡 찾아가 접촉 '007 작전'

보통 VIP 응대는 연구원이 아닌 프라이빗뱅크(PB)
의 몫이다. 그런데 최근 증시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PB를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 PB보
다 연구원이 더 각광을 받는 것이다. 고객 확보가 우
선인 영업직원이거나 PB와 달리, 시장이나 종목 상황
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연구원의 장
점이다. 이 때문에 VIP 고객들이 증권사 조직의 핵
심 브레인인 연구원들을 직접 초청하는 것이다.

코스피지수 1,000 붕괴가 신호였다. 이후 객장
및 대규모 투자설명회는 파리를 날리고 있지만, 1
인 혹은 소규모 투자자문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전언이다. 재테크에는 쟁쟁한 것으
로 알려진 의사들이 100억원대 투자자문회를 조성하

는가 하면, 부동산으로 돈깨나 번 땅부자와 연예인
들도 기회를 노리고 있다.

물론 부자들의 걱정도 다르지 않다. 이선업 굿모
닝신한증권 연구원은 "다시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
니냐는 우려 탓에 부자들도 현금을 여다다 돌리고
민하고 있다"며 "특히 '불패신화'를 누렸던 부동산
부자들은 주식과 펀드에서 실패를 맛보면서 부쩍 걱
정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특별 서비스'를
찾는 횟수도 잦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10월 실질고
객예탁금(개인들의 주식 매수용 자금)은 4조9,055
억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부자들
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고한유기자 jutbae@hk.co.kr

“증권사 위탁증거금 뒤통은 조정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아니다”

고법, 우리투자증권 승소판결

증권사가 투자자의 종목의 위탁증거금(주식매수계약금) 비율을 뒤늦게 상향조정했다라도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35)는 2007년 4월 코스닥상장업체인 루보의 주식을 투자금의 60%는 증권사(우리투자증권)에서 빌리고 40%는 본인이 내는 ‘미수거래’ 방식으로 매입. 총 3억951만여원을 마낀 상태에서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그런데 4월 16일 검찰이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폭락했다.

결제일이 돼도 김씨가 잔금을 납입하지 않자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일부 대금을 회수했다. 그러나 2억3000여만원은 받지 못했고 김씨를 상대로 미수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증권선물거래소 등은 루보 주식이 급등하자 2006년부터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며 “증권사는 검찰이 수사발표를 하자 위탁증거금 비율을 40%에서 100%로 뒤늦게 높여 투자위험을 고객에게 제때 알리지 못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지대운)는 9일 우리투자증권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미수금

반환 소송에서 “증권사에 미결제 금액의 전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확정 요소가 많은 증권거래 특성상 증권선물거래소가 수 차례에 걸쳐 투자자의 종목 지정 등을 했다고 해서 시세조종 행위가 있다고 증권사가 단정하기는 어렵기에 증권사가 투자위험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불확정 요소가 많은 증권거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투자로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위탁증거금은 본질적으로 매수주식의 결제책임을 부담하는 증권사의 위험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설사 증권사가 투자위험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탁증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은 것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민재 기자 pmj53@hankyung.com

증권사 손실보전 각서는 무효

부산지법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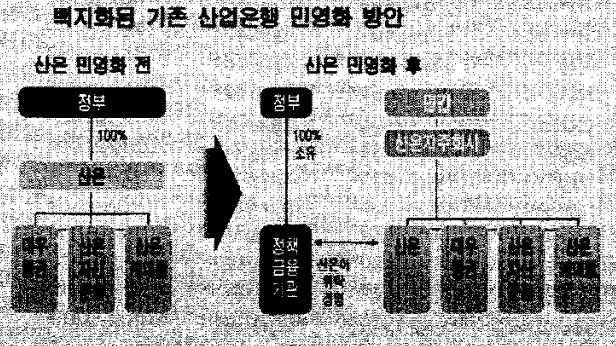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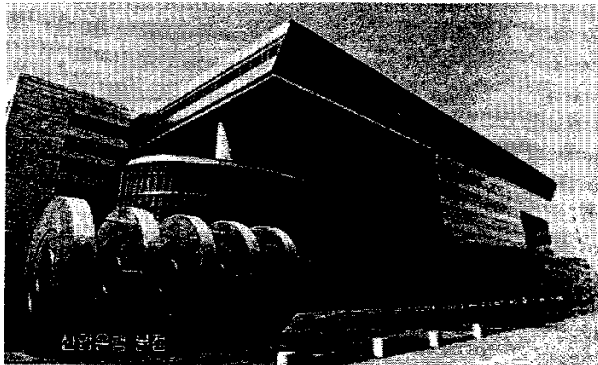
펀드 원금을 보장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증권사 직원의 각서를 받은 투자자가 손실금 발생 이후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김성우 판사는 8일 펀드 가입자 A씨가 증권회사 직원 여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3월 여씨 소개로 기준가 1000에 한 투자신탁펀드에 2억원을 넣었지만 지난해 1월 기준가

가 610.95까지 떨어졌다. 화가 난 고객이 원금보장을 요청하자 여씨는 ‘2008년 3월 25일까지 원금 이하로 상환되는 경우 원금 2억원을 보장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A씨는 만기일인 지난 3월 24일까지 기준가가 697.28로 급락하는 바람에 1억3900만여 원만 돌려받게 되었다. 확인서를 근거로 손실금 6050만여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손실이 나도 고객이 손실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박동민 기자



産銀 민영화 사실상 물건너가

■ 정부 여당 "시장환경 급변" 현실론

정부·여당이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는 '현실론'에다 현재 마련된 산업은행 민영화 '물'에 적잖은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기존 산업은행 외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기능을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키로 했다.

'백지화 가까운 유보'에 당정 공감대 '정책금융' 강화...기업 지원역할 주력

한나라당 핵심 의원은 9일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유보하는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산업은행 민영화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집권여당 내부에서 당초 마련

한 민영화 방안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고 청와대 등의 생각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여권에선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한국개발은행(KDB)을 만드는 민영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KDB의 기능과 실효성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했을 뿐 실제 흐름은 철저히 검토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정책금융 기능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현재 산업은행 민영화안은 산업은행을 매각해 받은 돈으로 KDB를 만들어 정책금융을 담당케 한다는 것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정부가 (정책)자금을 직접 공급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지금은 정책금융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은행 민영화 백지화를 공식화하기보다 금융시장 불안 등을 고려해 '유보'하는 수준에서 당정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유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정책금융 재편방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이에 따라 산업은행 민영화 프로젝트는 일단 '스톱'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핵심 의원은 "앞으로 실물경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가능하기 어렵다"며 "산업은행이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외환위기 극복 과정이나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한 역할을 다시 떠올려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금융시장 환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산업은행 민영화를 서두르면 문제가 많다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됐고 정부 측에도 비슷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지현·오상현 기자 swallow@**

펀드매니저들 NH證에 가는 이유

적절한 주제·최고권위 강사진... 알찬 컨퍼런스 인기

최근 기관 펀드매니저들의 발걸음이 자주 NH투자증권으로 향하고 있다.

요즘 매니저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히 긁어주는 고급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NH투자증권은 지난 8일 여의도 본사 대강당에서 '조선·해운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총 120여명이 참석, 강당을 가득 메웠다. 대상은 기관 매니저였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관련 업자와 지점 사람들까지 찾아왔다는 후문이다.

일단 주제 선정이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조선·해운은 요즘 발주 급감과 운임 급락 등으로 시황이 급랭하고 있어 매니저 입장에서선 글로벌 신용경제 국면의 영향을 받은 일시적 조정인지 선박 과잉공급과 물동량 감소에 따른 구조적 조정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

아울러 강연자도 여의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애널리스트나 센터장이 아니라 관련업계의 권위자로 구성돼 살아있는 경험과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마련됐다.

지난 8일 강사진은 한진해운 선대 기획담당 임원인 김태훈 상무, 대한

해운 기획실 안재혁 상무, 대우조선공업이 자주 NH투자증권으로 향하고 있다. 해운사 계열사인 머스크브로커코리아 대표를 역임한 김신현 폴스타마린 대표였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전지통신연구원 박사들과 동진폴리실리콘 실무팀장을 강사로 내세워 태양광산업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NH투자증권을 처음 준비한 컨퍼런스였지만 이때도 80명 정도가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형증권사들이 개최한 포럼은 연예인 초청과 고가의 선물로 화려하지만 정작 내용은 없었다"며 "이번에는 연예인도 볼 수 없고 작은 선물도 없었지만 궁금증을 풀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종승 NH투자증권 센터장은 "지난달 처음 개최할 때는 과연 사람들이 올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며 "앞으로도 한달에 한번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주제로 선정해 관련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모시고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yunew@

‘이익보다 자산가치’ 새 국제회계기준 내년 도입

대한제당 등 자산많은 기업 유리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로 덕을 볼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

IFRS는 전 세계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회계기준으로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화된다.

한국은 일부 기업들이 내년부터 조기 도입해 재무제표를 공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IFRS를 적용하면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지키는 투자’가 선호되는 조정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주가수익비율(PER)보다는 기업의 청산가치라는 안전 마진을 확보한 PBR 지표가 설득력을 지닌다.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토지 등 부동산이 많거나 우량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등을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자회사 지분율이 50%가 넘을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IFRS 수혜 예상되는 저PBR주

(단위=배·원)

종 목	PBR	증가
대한제당	0.73	54.300
대성산업	0.81	66.500
경방	0.26	64.800
성광기업	0.56	13.950
한국전력	0.40	26.500
대구백화점	0.25	7.280
한성	0.40	7.190

* 11월 7일 기준, 2008년 컨센서스

자료=에프엔가이드, 한화증권

비록 토지는 자산가치 감소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겠지만 장부가와 시가 간 괴리가 높았고 입지의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면 새로운 제도가 주가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대한제당은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예정지에 인접한 본사와 자회사가 소유한 역삼동 소재 2개 빌딩, 인천 북성동 공장 용지, 충북 청원 공장 등 부동산 가치가 7444억원에 이른다.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만 합해도 시가 총액을 넘는데 PBR은 0.7배에 그

치고 있다.

대성산업도 3000억원대의 토지 장부가가 시가총액 이상이며 자회사 대성산업가스의 지분도 55%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대구백화점은 총자산 대비 토지비율이 30%를 웃돌아 토지 재평가시 순자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한국전력은 최근 한국신용평가로부터 AAA 등급을 받은 한국남부발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소아 기자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과 부채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자회사 등 종속 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중요정보

2008년 11월 10일 월요일 E02면

저축은행으로 ‘전의 이동’

고금리 상품 줄이자 지난달 1조3000억원 물려

지난달 상호저축은행에 예·적금으로 1조3000억원의 시중 자금이 물렸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저축은행의 총수신액은 58조5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1조3383억원 늘어났다. 지난 9월의 증가액(2336억원)과 비교하면 5.7배에 달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연 8%대에 달하는 고금리 예금을 내놓은 데다 주가 하락에 따라 예금을 선호하는 현상

이 맞물리면서 시중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예금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저축은행에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예금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면 손해가 나고, 높은 금리로 대출을 했다가 부실이 생기면 건전성도 나빠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도 이를 의식해 최근엔 예

금금리를 낮추고 있는 추세다. 솔로몬저축은행이 지난달 23일 1년짜리 예금금리를 연8%에서 7.9%로 내렸고, 4일엔 영풍·신라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연8.2%에서 8.1%로 각각 인하했다.

수신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신규 대출은 증가 폭이 둔화됐다. 지난달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액은 예·적금 증가액의 절반 수준인 6424억원에 그쳤다. 9월엔 대출이 6608억원 늘어났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경색에 대비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했지만 신규 대출은 더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2008 코스피 상승종목

- 코스피시장 전체 종목수 : 926종목, 수량주가 기준, *표시는 간지종목

순위	종목명	연초기준가	11월7일 종가	등락률
1	SH에너지화학우	37,000	195,000	427.03
2	대창공인우	59,900	240,000	300.67
3	태평양2우B	103,000	220,000	113.59
4	*유화	5,268	10,500	99.32
5	세발전지	6,620	12,800	93.35
6	삼화전기	3,380	6,450	90.83
7	올리머스	505	935	85.15
8	삼화전자	1,940	3,265	69.33
9	한전KPS	16,150	23,000	42.41
10	신원우	10,150	13,650	34.48
11	웰스브릿지우	3,500,000	4,500,000	28.57
12	한국특수철강	53,000	67,800	27.92
13	CJ CGV	12,900	15,700	21.71
14	로엔케이	3,703	4,495	21.39
15	경인양행	14,338	17,300	20.66
16	동방아그우	530,000	621,000	17.17
17	가신정기	6,340	7,400	16.72
18	남광토건	12,400	14,150	14.11
19	휴켄스	18,950	21,350	12.66
20	세아베스틸	15,700	17,600	12.10
21	농심	194,500	218,000	12.08
22	한샘	6,700	7,490	11.79
23	KT&G	79,700	88,700	11.29
24	대원제당	49,250	54,300	10.25
25	백광산업	38,971	42,950	10.21
26	남해화학	14,600	15,400	5.48
27	그려제강	37,950	39,900	5.14
28	거북선1호	5,190	5,440	4.82
29	신라교역	9,170	9,600	4.69
30	해인	4,465	4,670	4.59
31	삼성SDI	66,500	69,500	4.51
32	빙그레	37,700	39,300	4.24
33	아시아6호	4,695	4,870	3.73
34	아수페티스	1,355	1,400	3.32
35	온도가092 L	140,000	144,000	2.86
36	아시아7호	4,695	4,800	2.24
37	아시아9호	4,700	4,800	2.13
38	동북아5호	4,670	4,730	1.28
39	아시아10호	4,250	4,290	0.94
40	아시아5호	4,095	4,120	0.53
41	동북아3호	4,150	4,160	0.21
42	동북아6호	4,095	4,095	0.00

어려울때 빛나는 경기방어주

올들어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서도 경기방어주들은 이음값을 제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종목간 차별화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며 "시장지배력이 커 경기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량주 위주로 접근할 때"라고 조언했다.

9월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 926개 종목 중 연초 기준 대비 상승(7월 종가기준)한 종목은 전체 926개 종목의 4.5% 수준에 그친 42개로 집계됐다.

이들 중 우선주를 제외하고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세방전지(93.35%)였고, 하이브리드카 관련주로 분류되는 삼화전기와 삼화전자는 각각 90.83%, 69.33%로 상승률 6위, 8위에 올랐다.

특히 업종 내 과점적 지위로 안정적 수익을 내는 경기방어주가 상승종목에 대거 포진했다.

공기업인 한전KPS는 1만6150원에서

2만3000원으로 42.41% 올라 상승률 9위에 올랐다. 국내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원가보상 방식에 따른 수익성 보장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상대적 강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영화산업 과점업체 CJCGV는 1만2900원에서 1만5700원으로 21.71% 올라 상승률 13위를 기록했다.

CJCGV는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업종내 과점적 지위... 경기침체 속 안정적 수익

코스피 -40%불구 한전KPS 42%·CJCGV 22% ↑

데다 영화관람 요금이 다른 문화상품보다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에서 불경기를 잘 견뎌낼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3분기 전국 영화관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지만 CGV 관객수는 오히려 5.5% 증가해 과점사업자로서 수혜를 입고 있다.

농심, 한샘, KT&G 등은 올들어 11~12% 상승해 나란히 상승종목 21~23위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가 올들어 40% 급락한 점을 고려한다

면 이들 종목의 시장 대비 초과수익률은 51%~52%포인트에 달한다.

KT&G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는 제품 구성으로 올들어 증권사들의 잇단 러브콜'을 받았다.

농심은 음식료 대형주 가운데 현금 보유가 많고 자산가치 대비 가장 저평가된 데다 불황 속에 라면 매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 곡물가격 하락과 원화 환율 안정에 따른 수혜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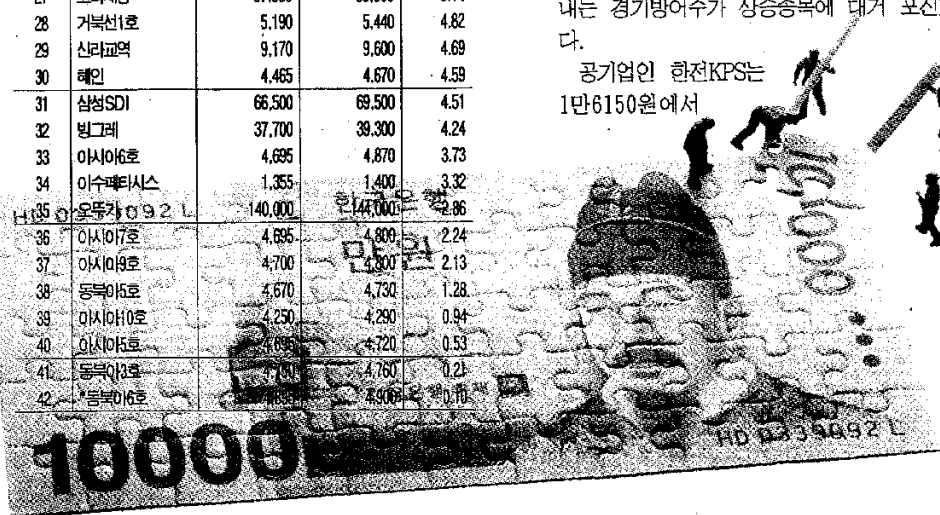
한샘도 강력한 시장지배력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은 대표적 중소형주로 거론된다. 자산가치가 두드러지는 대표종목인 대한제당과 백광산업도 각각 10.25%, 10.21%

상승했다. 곡물가격·환율 등 외생변수에 강한 빙그레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오프기는 각각 4.24%, 2.86% 올랐다.

차재현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내년 국내와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낮추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고정비나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타격을 크게 받겠지만 올해 선전한 경기방어적 기업들은 내년에도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river@

머니투데이





조용준의
버핏 따라하기

1등 주식은 불황 헤치며 열매 맺는다

투자자와 투기의 구분: 투자란 자산의 가치와 사업전망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투자원금을 지키면서 적절한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하며, 그렇지 못한 행위는 투기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중

● 벤저민 그레이엄이 제시하는
가치투자자의 길

첫째, 기업의 영업활동을
이해하라

둘째, 주가를 계산하고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

셋째, 당신의 지식과
경험에 용기를 가져라

워런 버핏은 그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의 서문에서 말했다.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데에는 높은 지능지수나 특별한 사업적 직관 또는 내부자 정보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바른 사고체계와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판단된다.

버핏은 독점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선호했다. 현명한 투자자는 경제가 어려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때 주가가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독점력의 정도, 즉 경제적 해자(壕子)를 중시한다.

실제로 우량 기업은 경제가 어려워 경쟁 기업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시장지배력을 높여 독점의 파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증가로 나타난다.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마련이므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양호한 기업의 주가는 위기 후 곧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과거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 폭락 후 반등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자.

필자는 버핏이 선호할 만한 국내 회사의 예로 농심과 신세계를 들고자 한다.

농심은 국내 제1위의 라면 제조회사이다. 주력 제품인 신라면 사발면 등은 독자이기도 친숙한 제품일 것이다. 이 중 신라면은 1986년에 출시된 장수 브랜드이며 라면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다. 신세계는 대형마트에 감정을 가진 업계 1위의 유통전문회사다.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농심과 신세계의 주가를 살펴보자. 외환위기가 발생한 시기(1997년 12월) 농심의 주가는 2만8400원으로 1997년 3월 대비 48.8% 하락했으나 이후 반등해 현재 주가(11월 7일 종가)는 21만8000원을 기록했다. 신세계의 경우 상승 폭은 더욱 놀라운데 1997년 12월



경쟁사 문 닫으면 더 큰 수익 주가 부진해도 언젠가 올라

1만 원대인 주가는 현재(7일 종가) 45만2500원으로 급등했다.

농심과 신세계의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외환위기를 기회로 우량한 펀더멘털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으로 업계 전체가 암울하던 시기에 농심은 오히려 영업활동을 강화해 라면시장에서 입지를 굳혔다. 신세계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시기를 활용해 영업 용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 이것이 이마트 개점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훗날 외형 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외환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한국을 대표하는 가치투자회사 중 하나를 만든 에셋플러스의 강방천 회장은 1등 기업을 선호한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꼭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다른 말 필요 없이 1등 주식을 사라"고 말한다.

"주식투자자들은 1등 주식이 왜 좋은지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1등 주식은 당장 주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오르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경기 순환원리



에 있다. 경기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1등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는 불경기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3, 4, 5등 회사도 좋아지지만 불경기가 되면 5등 회사부터 문을 닫는다. 극심한 불황이 되면 2, 3등 회사도 문을 닫을 수 있다. 하지만 1등 회사는 경쟁회사가 문을 닫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벌 수 있다. 외환위기 때를 돌아보자. 1등 기업은 하나같이 살아남아서 몇 배씩 주가가 올랐다. 1등 기업은 항상 장기적인 승자로 남는다."

지금 주식시장은 경제위기의 부담 속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독점력이 강한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버핏의 스승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제시한 주식투자 원칙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영업활동을 이해하라.
둘째, 주가를 계산하고 안전마진을 확보하라. 안전마진이 불투명하다면 주식을 매입하지 않아도 좋다.

셋째, 당신의 지식과 경험에 용기를 가져라. 사실을 통해 결론에 도달했고 당신의 판단이 건전하다면 그에 따라 행동하라. 다른 사람이 망설이거나 당신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이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후순위채권' 발행 늘린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금융회사들이 후순위채 발행에 적극 나설 채비다.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등을 감안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8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키로 하고 10일부터 일선 영업점에서 만기 5년6개월, 연이율 7.7%의 후순위채 판매를 시작한다.

후순위채는 법인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최소 1000만원 이상에 100만원 단위로 투자단위를 정할 수 있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후순위채는 보완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금융기관들은 단기적으로 BIS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한다.

BIS비율은 대출 등 위험이 있는 자산에 대해 자기자본을 얼마나 쌓아놓았는지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다. 은행은 8%, 저축은행은 5%를 유지하면 되나 금융당국은 은행 10%, 저축은행 8%를 우량기준으로 제시한다.

국민은행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

국민銀 8000억이어 우리·하나銀도 연내 발행 자기자본 확충 통해 BIS비율 제고 효과 기대

서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4조원가량을 지출한 터라 자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후순위채 발행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후순위채 발행이 완료되면 BIS비율이 0.5%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업 및 가계대출여력도 늘어나서 보다 탄력적인 여신영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3/4분기 BIS비율이 2003년 4분기 후 처음으로 한자릿수(9.76%)로 떨어졌으나 후순위채 발행이 끝나면 두자릿수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행 외에도 다수 은행이 후순위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연내 1조원 범위에서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

하반기 은행별 후순위채 발행현황

(단위:억원)

발행기관	발행일	만기	발행액
국민은행	8월13일	7년6개월	2,500
국민은행	8월13일	6년6개월	2,600
국민은행	9월25일	5년6개월	237
국민은행	9월26일	5년6개월	1,822
국민은행	11월10일	5년6개월	8,000
농협	9월26일	5년6개월	4,000
우리은행	9월23일	5년6개월 6년6개월	2,000
하나은행	9월17일	6년4개월	3,800

고 있다. 하나은행은 연말까지 2차례로 나눠 총 5300억원여치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외환은행도 후순위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자기자본 확충계획안에 5000억원

◇후순위채란 =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변제순위가 뒤로 밀리는 리스크로 채권이자가 대개 시중금리보다 높다. 금융기관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후순위채권 중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5년 미만 채권은 매년 20%를 자기자본에서 제외한다. 은행들은 통상 만기 7~10년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안팎의 후순위채 발행계획을 포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9월 각각 2000억원, 3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저축은행들도 최근 BIS비를 하락에 대비해 유상증자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시장여건이 좋지 않아 후순위채 발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익태·반준환 기자 epping@

미분양펀드가 부진한 이유

시장상황 대비 예상수익률 낮고
기존 자금 조달방식과 차이없어

미분양아파트펀드가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도구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분양아파트를 신탁해 처분하는 펀드는 현재 부동산·자본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예상 수익률이 낮고 운용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는 펀드는 기존 건설사의 자금 조달 구조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가 7일 발행한 '부동산마켓리포트 11월호'에서 황규완 선임연구원은 미분

양아파트 해소방안의 하나로 기대를 모으는 미분양펀드의 출시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미분양펀드는 다올부동산자산운용의 '다올랜드칩 특별자산신탁' 처럼 미분양아파트를 신탁해 처분하는 펀드와 KB국민은행이 출시를 계획 중인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는 펀드가 있다.

황 연구원은 담보대출방식 미분양펀드는, 언제 출시될지 불투명한 상태고 '다올랜드칩 특별자산신탁'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수익성 저하, 아파트 매입물량 확보의 어려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거부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분양펀드 출시가 가시화되지 않는 이유로 예상 수익률이 기대치보다 낮은 점을 꼽았다.

황 연구원이 할인율을 20~30%로 잡아 신탁처분방식 펀드의 예상 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3년 뒤 펀드 해지 때까지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연평균 5%면 수익률은 30%라고 설명했다. 또 연평균 2% 상승하면 수익률은 19%, 연평균 2% 하락하면 수익률은 5%로 집계됐다.

할인율을 감안하면 3년 뒤 펀드 해지 때까지 가격이 떨어져도 펀드는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수익률

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황 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침체로 3년내 모두 처분된다는 가정 자체가 무의미하고 자본시장이 최악인 점을 감안하면 매력이 없는 수익률이며 기존 계약자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높아 이같은 수익률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담보대출방식 펀드도 건설회사의 대출 만기연장이나 리파이낸싱과 다를 게 없어 확실한 신용보강구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를 유인할 메리트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근호 기자 guno@

머니투데이

産銀 민영화 표류로 中企자금 2,000억 낮잠

지원계획 수립 불구 KDF설립 논란따라 중단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표류하면서 온렌딩(on-lending) 방식으로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려던 2,000억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9일 "(지원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는 끝났지만 산은 민영화와 한국개발펀드(KDF) 설립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많아 자

금집행을 보류하고 있다"며 "온렌딩 방식의 지원은 KDF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금융위원회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지난 9월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한 후 10월 중 온렌딩 방식으로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하지만 미국발(發) 금융위기 등으로 산은 민영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원이 중단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정기국회에 산은 민영화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산업은행이 이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서울경제

펀드 소송, 터질 게 터졌다

요즘 증권사 고객은 의외로 조용하다. 주가와 펀드 수익률이 반 토막 났는데도 항의하는 고객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전 같으면 인격적 모욕을 견디다 못해 자기 돈 떨어 고객 손실을 보상에 주고 직장까지 그만두는 증권사 직원이 수도룩했을 게다. 증권사를 오래 다닌 직원들은 “성숙해진 투자문화 덕분”이라며 가슴을 쓸어 내린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투자자들이 새로운 대응 방식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소송이다. 펀드가 반 토막을 넘어 강풍이 돼 버리자 지난주까지 이미 두 개의 펀드가 소송에 휘말렸다. 준비 중인 소송도 여러 건이다.

물론 펀드를 판 은행이나 증권사는 불면소리다. 이익 날 땐 좋아하더니 이제와 판소리라는 것이다.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계약서에 도장도 다 받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최현철 기자의
여의도 켈러리

최근 소송이 걸린 파생상품 펀드를 판 은행 직원에게 상품의 구조를 물어봤다. 이미 문제가 된 상품이어서 답변을 충분히 준비했을 법한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10분 이상 설명을 들어도 헛갈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설명을 하고 있는 은행원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의 의심이 갈 정도였다. 그만큼 복잡한 상품이었다. 이걸 “○○은행 펀드에 들었다”고 알고 있는 고객에게 팔았다. 어떤 말이 오갔을까? “은행 예금만큼 안전하고 이자는 높다는 말에 가입했다”는 투자자의 항변이 이해가 간다.

그동안 은행이나 증권사는 펀드 판매로 엄청난 수수료를 챙겨왔다. 그런데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안중에 없다. 좋은 펀드를 찾기보다 수수료

높고 회사가 미는 펀드를 강권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안으로 풀아가던 문제가 수익률이 급락하자 터져버린 것이다.

물론 투자자도 문제가 없지 않다. 한 애널리스트는 “차를 살 때도 며칠씩 고민하며 요모조모 따지는 사람들이 그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펀드에 넣으면서도 상품 내용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맞는 말이다. 특히 파생상품도 아닌 일부 주식형 펀드 가입자마저 손실을 물어내라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번 주 금감원에선 문제가 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 내용에 따라 투자자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사건이 펀드 판매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판매사의 관행은 그대로 두고 투자자의 의식만 성숙해지길 기대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

chdck@joongang.co.kr

서울경제

2008년 11월 10일 월요일
A37면

KBS미디어 대표이사 남선현씨



남선현(사진) 전 KBS 글로벌센터장이 최근 KBS미디어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공모를 통해 선발, 10일 취임하는 남 사장은 KBS 영상사업단 이사,

KBS 글로벌센터장 등을 거쳤으며 퇴직 후 한 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매일경제

2008년 11월 10일 월요일
A37면

■KBS ▲라디오제작본부장 고성균

■서울신문 ▲편집국 편집1부 차장 류기혁 이상훈 ▲편집국 편집2부 차장 이경숙 ▲편집국 편집2부 미술팀장 이완형 ▲편집국 정치부 차장 박찬구 ▲편집국 사회2부 차장 이기철 ▲편집국 정책뉴스부 차장 최용규 ▲편집국 국제부 차장 황수정 ▲편집국 경제부차장 진경호 ▲편집국 산업부 차장 김성곤 ▲편집국 문화부 차장 문소영 ▲편집국 사진부 차장 최해국

기자의 눈

입을 닫은 증권전문가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 10월 이후 리서치센터장 등 증권사 전문가들이 입을 닫았다.

한 증권사의 A센터장은 "당분간 증시 전망을 하기 어렵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며칠 전 어렵게 만난 국내 유력 증권사의 한 최고위급 임원 역



유병은 기자
(증권부)

일부 증권 전문가들에게는 못 내 아쉬운 점이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내 증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해야 할 주체이며 희망을 말하기 위해 끊임없이 근거를 찾아야 하는 직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1월 첫 주 주식시장은 평온했다. 주간 상승폭이 1.9%에 그쳤고 모멘텀 부재도 여전히 향후 불확실성이 높지만 악몽 같던 10월을 생각하면 늦가을에 불어오는 훈풍 같았다.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다시가운을 차란 모양이다. 한미 봉하스와 프 체결, 오비마 효과, 한국은행의 추가금 라인하 등 연이어 들려오는 호재에 희망 섞인 분석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근거 없는 낙관은 위험하지만 비관에 빠져 있는 투자자들에게 희망의 재료를 찾아줘야 하는 것도 애널리스트의 중요한 임무이기 이들의 희망 찾기는 여전히 소중하다.

잊그제 만난 한 애널리스트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서 날을 샀다"고 했다.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희망의 근거를 찾기 위해 날을 새곤 한다는 말에서 희망을 봤다.

rocinante@sed.co.kr

시 '오프 더 레코드'를 당부했다. 그가 기자에게 힘들게 보도도를 요청한 내용은 "국내 증시가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같다" 정도였다. 그저 요새 같은 장에 이름이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며 회사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다.

증권업계 인사들이 나서지 않고 있는 사이 이들의 자리를 재야 전문가가 꿰찼다. 사표의사로 유명한 박경철씨는 잇따른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향후 전망은 어두웠지만 "살아 남으려면 부채를 없애라" "주식시장의 실체를 알고 도전하라"는 조언을 잊지 않았다.

박경철씨와 말을 잃은 증권사 전문가 간에 이처럼 상이한 행동이 나타난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전자는 증시 하락 전망에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재야 인물이며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입을 닫은

기자수첩

불완전판매? 불감증판매!

지난달 '우리과워인컴펀드' 투자자 160여명은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얼마전에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환매가 중단된 우리2스타파생상품펀드 'KH-3호'와 'KH-8호' 투자자들이 손해 본 원금과 이자를 보상하라며 법원을 찾았다.



임상연
증권부/sylim@

이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판매사들의 과도한 환헤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역외펀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줄소송이 예고됐다. 이쯤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판매사나 운용사가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송펀드'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문제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지만 판매사나 운용사, 감독당국 등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판매사들은 "위험을 고지했고, 사인까지 받았다"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 감독당국도 "약관이나 규정 위반이 아니면 책임을 묻기 힘들다"며 한 발 떼는 모습이다.

물론 대박에 사로잡혀 앞뒤 안가리고 펀드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펀드판매 실태를 보면 과연 판매사나 운용사, 감독당국이 약관이나 규정 따위를 변경거리로 내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펀드투자가 정점에 달한 지난해 11월 A은행 한 지점에서 벌어진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화제가 된 모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고객들은 번호표를 들고 지점 창구 밖까지 길게 줄을 섰다. 지점 직원들은 영업시간 내 그 많은 펀드 가입을 처리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미리 가입신청서를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차례가 된 고객에게 지점 직원이 해준 것이라곤 펀드용장과 투자설명서를 내준 것뿐이었다. 그것뿐이었다.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불감증판매. 거저없이 오르면 증시에 취해 모두가 불감증에 걸린 듯했다. 한번 잃은 신뢰를 되찾기란 쉽지 않다. 무너진 신뢰가 이대로 방치된다면 펀드시장은 물론 동북아 금융중심지를 꿈꾸는 국내 자본시장마저 허물어질 수 있다.

은행 - 보험의 '지급결제 허용' 갈등

최근 은행업계와 보험업계 사이에 갈등의 끈이 깊어졌습니다. 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를 둘러싸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지급결제를 할 수 있게 되면 고객은 보험사에 계좌를 열고 이를 통해 월급을 받고 공과금을 이체하는 등 은행통장처럼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에 보험료를 자동이체할 경우에도 반드시 은행계좌를 이용해야만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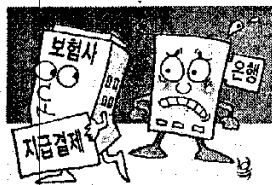
은행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증권사의 수시입출금 통장인 종합자산관리(CMA) 계좌에 지급결제 기능이 주어지면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고객을 유인하자 은행 예금이 증권사로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여기다 보험사에도 결제 계좌가 생기면 돈이 더 빠져나가겠지요.

은행은 "보험사는 은행에 비해 위험자산 비중이 크고 천재지변성 사고에 따른 경영리스크에 노



경제 카페



금융위, 보험사에 허용 추진

급변하는 금융 시금석 될 듯

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면 금융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은행들은 또 "보험상품은 금융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지급결제용 자산은 전액 외부에 위탁해 운용할 것이므로 리스크가 커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실명제 문제도 고객별로 예탁계좌를 설정하면 문제없다는 설명입니다.

은행의 고유기능으로 받아들이지던 지급결제 업무에 제2금융권의 진입을 금융당국이 허용하려는 것은 '경쟁 촉진'을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시도가 가능해진 것은 금융감독의 발달로 증권, 보험 등에 대한 건전성 감사가 수월해진 데다, 전산기술 덕분에 결제 실패의 위험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금융 산업의 거대한 지형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됩니다. 일각에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자통법 시행을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우리 금융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류원식

경제부 기자

rews@donga.com

동아일보

정부, 수정예산안 반영 '중기 재정계획' 손질

경기부양 위해 '재정 건전성' 포기

임기말 경제성장률 7% 목표는 유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재정 지출을 늘리기로 하면서 2012년 국가채무 비율은 3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의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1% 정도에서 역제기로 한 당초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그러나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금처럼 6.8%로 놔두기로 했다. 오차 범위(±0.2%포인트)를 감안하면 연 7% 경제성장률 달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같이 바뀐 중기재정계획(2008~2012년)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내년 초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채 발행 통한 재정 확대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발

표한 수정예산안을 반영해 중기 재정계획을 다시 짜보니 2012년 총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9%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32.7%인 국채 비율을 임기 안에 31%까지 줄이기로 한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비하면 3%포인트 정도 늘어난 수치다.

정부 수입은 늘어나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 및 기금지출을 대폭 확대키로 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목표 훼손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2년 균형재정(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가기로 했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2012년 예상되는 적자는 4조3000억원으로 GDP의

0.3% 정도여서 국제기준(1% 내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은 당초 예상치(179조6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한 177조7000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원래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잡고 짰는데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총지출(예산 기금 공기업 합계)은 올해보다 11조원 늘리기로 했다. 가만 놔두면 3%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제성장률을 정부 수정 목표치인 4%가 되도록 재정으로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당초 10조4000억원에서 21조8000억원까지 불어나게 생겼다. 내년 일반회계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계획(7조3000억원)

보다 10조3000억원 더 늘어난 21조6000억원어치에 달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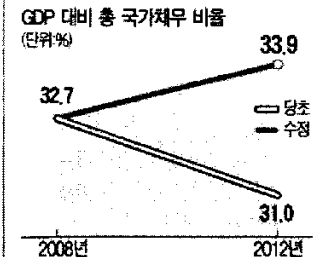
7% 성장 목표는 유지

정부는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에서 임기 말 한 해라도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로 했던 목표와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 선에서 묶어두기로 한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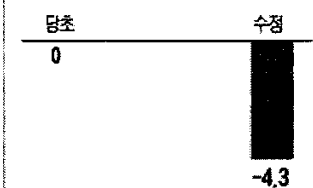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5%에서 4%로 낮춰 잡은 대신 매년 0.4~0.8%포인트씩 성장 속도를 높이기로 한 목표를 0.8~1%포인트로 끌어올려 2012년에 가서는 기존 계획대로 6.8%(오차범위 ±0.2%포인트)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계속해서 위기 극복 이후 성장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출발선(내년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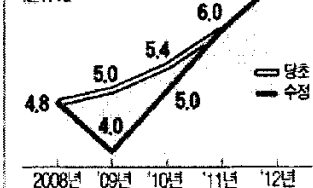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 재정운용계획 변화



임기말 재정수지 목표
(관리대상수지 기준, 단위: 조원)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성장률'이 뒤로 밀려난 만큼 '보폭(성장률 증가폭)'을 넓혀 결승선을 통과하는 시기는 전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차기환/김연식 기자 khcha@hankyung.com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

미국서 내년 9월 개설

증권선물거래소는 7일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그룹과 내년 9월 중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을 개설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거래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야간시장에 대한 업무 규정을 마련하고 거래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한 후 8월 테스트를 거쳐 야간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야간시장의 매매 체결은 CME그룹의 24시간 전자거래시스템인 '글로벌렉스'에서 이뤄지며 청산과 결제는 거래소가 담당한다.

시장 운영을 위해 CME그룹은 네트워크 허브를 서울에 설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와 연계될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기반의 야간시장 시스템(USN)을 독자 개발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기업 부도前에 선제적 구제금융”

黨政 “위기조짐 때 구조조정 촉진 방안 등 검토”

李大統領 “위기확산 막기 위해 단호한 대응”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단기적 자금난에 빠질 경우 부도가 나기 전이라도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 관련기사 A8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기업이 (부도 등으로) 망한 다음에야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건설사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대주단(貸主團)협약’처럼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선제적 자금지원과

구조조정 개입의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조짐을 보일 경우 본격적인 부실 상태에 접어들기 전에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구조조정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시작했다”고 했다. 임 의장은 “지금까지는 금융 문제였다면 실물분야 영향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추운 겨울의 시작이다.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구조조정을 스

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지금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공조추진분과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금융위기의 확산과 실물경제로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선제적이고, 단호하며, 충분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경우 이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국제적인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 여파가 국내 기업들로 번질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제도를 준비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권대열 기자 dkwon@chosun.com

캐피탈社들 “자금지원 요청”

자금난에 빠진 캐피탈사(社)와 리스사(社)들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유동성(流動性·자금)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9일 “이병구 여신협회장과 주요 캐피탈사, 리스사 임원들이 오는 11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업계 현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캐피탈사와 리스사는 은행과 달리 예금을 받을 수 없어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는데, 최근 금융 경색으로 채권이 팔리지 않아 채권 발행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조익준 기자 joyjune@chosun.com

외화차입금 60% 하루단위 연장

한-미 통화스와프에도 외화자금시장 불안 여전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한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의 60%를 하루씩 만기 연장을 해가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차입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이는 외화자금시장에서 오버나이트물(하루짜리 차입)을 새로 조달하는 것과 비슷해 사실상 자금을 회수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지난달 말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안 국회 통과와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교환 발표 이후에도 외화자금시장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차입금 가운데 2일 이상 만기가 연장되는 비율은 40% 안팎에 불과하다”며 “은행 채무보증과 통화교환 발표 이후에도 크게 사정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2일물 이상으로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외화차입금도 다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일부 자금을 회수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만기연장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차입금의 40%를 1개월 만기연장을 했다 해도 1개월 뒤 다시 일부만 만기 연장될 경우 한두 달 사이에 70~80% 이상의 자금을 회수당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1개월이 넘는 만기 연장이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국책 은행을 중심으로 예외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것이 외환당국의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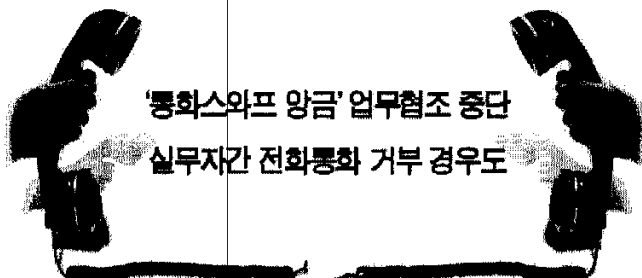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들의 외화차입금은 모두 300억달러며, 내년 상반기까지 치면 700억달러의 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1주일~한달짜리 만기연장이 많아 매일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 규모는 20억~30억달러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 은행들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자산건전성을 맞추기 위해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위기로 국내 은행들의 신용도도 불안한 상태여서 외화자금 시장이 쉽게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화자금 시장이 풀리지 않으면서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외환시장도 좀처럼 안정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오르는 것은 외국인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외화자금 시장에서 국내 은행들의 차입금 만기 연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환율이 쉽게 안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남기 선임기자 jnamki@hani.co.kr

경제가 풍전등화인데... 재정부·한은 '길어지는 냉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불화가 심상치 않다.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의 공치사 문제로 깊게 팬 감정의 골이 쉽게 메워지지 않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두 기관의 대립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9일 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최근 두 기관의 업무협조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자들 사이에선 아예 통화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달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발표를 앞두고 언론에 정보가 미리 흘러 나가면서 촉발됐다. 외부에서부터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소문이 조금씩 떠도는 과정에서 재정부 기자들이 취재에 들어간 게 화근이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철통 보안'에 주력했으며 정보를 흘리거나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한은은 믿지 않았다.

한은은 이에 자극받아 재정부와 협의 없이 단독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날 주요 언론들이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재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보도하자 한은은 다시 재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한 다며 반발했다.

한은 측은 "재정부가 국제관계를 무시하고 정보를 미리 흘려 협정 체결을 위협하게 만들었고 협정 체결 당사자인 한은까지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정보를 미리 흘리거나 언론플레이에 나선 적이 없다"며 "최근까지도 한은이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과 관련, 적극적으로 움직

이지 않아 협상이 어렵게 진행됐는데 일이 성사되니까 뒤늦게 자신들의 공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맞받았다.

과장이 커지자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은 총재가 전화 통화를 통해 협력관계 복원을 약속했지만 두 기관의 '냉전'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비단 한·미 통화스와프만 놓고 볼거진 문제라기보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여있던 감정이 분출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재정부는 '위기상황에서도 한은이 무책임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며 불만을 표시해왔고 한은은 "재정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우리나라의 대표 엘리트 집합소인 두 기관의 오랜 자존심 싸움도 한몫했다.

그러나 이같은 '냉전'이 장기화하면 두 기관의 공조가 필요한 외환시장 안정, 한·미 통화스와프 기한(내년 4월말) 연장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원/달러 환율문제를 놓고는 이미 '불협화음'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이성태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환율을 진정시키는 게 용이한 일은 아니다"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재정부가 서둘러 대규모 개입을 단행, 환율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더 늦기 전에 재정부와 한은간 협력관계의 복원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성배 기자 ppark@

“금융감독청 신설 감독 총괄 금융정책 재정부로 일원화”

정치권 공론화... 정부선 부정적

국제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원화된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공론화하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위는 14일 ‘효율적인 재정·금융정책 수립 방안’ 공청회를 열어 금융감독청 신설 등에 대한 재정위의 종합 의견을 모은 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금융감독청 신설에 부정적인 데다 비공무원인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 과정에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재정위원

장은 이날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국제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부처 간 기능 분산에 따른 공조 미흡, 정보 공유 부족으로 효과적인 위기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의 국내금융정책 기능이 금융위로 이관되는 등 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정책을,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정책을, 금융감독원은 시장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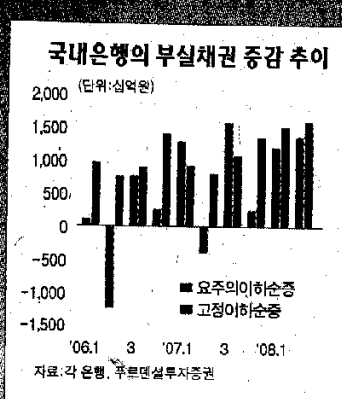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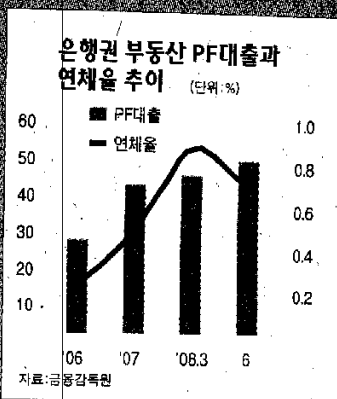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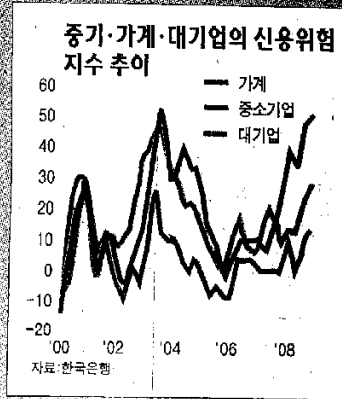
재정위는 ▲금융위의 국내금융정책을 재정부로 이관하고 ▲통합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을 정부조직 또는 정부 산하 독립청으로 신

설하며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간의 자료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기로 했다.

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여야 의원들이 금융정책 기능 분산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청 신설 등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재정부 출신 여야 의원들이 관계부처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현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대정부 질문에서 “현 금융감독체계는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금융감독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우제창 의원의 지적에 강만수 장관은 “현재로서는 금융감독 일원화보다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남상훈 기자



건전성·수익성 “내년이 더 걱정”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당장의 '현재형'이 아닌 내년 이후에 대한 '미래형'의 문제다. 당장은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가 내년 이후로 장기화 될 경우 이를 버텨낼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이다. 국내 은행들도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은행의 펀더멘털이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는 시각이 많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지적이다.

◇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내년에는 더 나빠진다=3·4분기 중 상당수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국민은행은 2·4분기 12.45%에서 3·4분기 지주사 전환에 따른 자사주 영향으로 9.76%로 낮아졌다. 신한은행은 12.5%에서 11.9%로, 외환은행은 11.56%에서 10.64%로, 기업은행도 10.49%에서 10.15%로 하락했다. 우리은행은 10.39%에서 10.50%로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말의 11.6%에 비해 1%포인트 떨어졌다.

연체율도 일제히 상승했다. 국민은행의 총 연체율은 0.68%, 신한은

연체율 갈수록 높아지고 순익은 급전직하 국민銀 후순위채 발행이여 他은행 잇따를듯

행은 0.69%로 2·4분기에 비해 각각 0.11%포인트, 0.02%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은 0.13%포인트 상승한 0.69%, 하나은행은 0.17%포인트 뚝 0.88%를 기록했으며 기업은행은 0.33%포인트 오른 0.67%로 집계됐다.

순익도 추락했다. 우리은행은 45.6% 줄어든 1,332억원, 국민은행은 28.6% 축소된 5,533억원, 신한은행은 32.2% 감소한 2,143억원을 기록했고 하나은행은 711억원 순손실을 내면서 8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다.

◇은행, 부실자산 줄이고 자본확충 늘린다=국민은행은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8,000억원 한도로 영업점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후순위채권을 판매한다. 금리는 연 7.7%이며 만기는 5년6개월이다. 복리로 할 경우 7.92%로 높아진다. 시장 상황에 따

라 추가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자산매각 등을 진행하면 자사주 매각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올해 말 BIS비율을 11%대로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국민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에 고객들이 몰릴 경우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후순위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실자산 매각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KB유동화전문회사는 지난주 1,8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1,4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매각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1,000억원, 우리은행은 2,000억원 안팎, 하나은행도 2,000억원가량을 매각할 예정이고 외환은행도 연내 3,000억원을 매각할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매각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우승호기자 derida@sed.co.kr

2금융권도 '좌불안석'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보험 등 제2금융권도 건전성 악화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갈수록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보험회사들은 유가증권 가치 하락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져 자본확충을 서두르는 형편이다.

부동산 경기가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의 PF 대출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의 PF 금융규모는 지난 6월 말 현재 97조1,000억원에 달했다. 은행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0.64%로 나온 편이지만 제2금융권은 그렇지 않다.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각각 6.57%, 4.2%로 은행권보다 훨씬 높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PF 대출이 12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24%를 차지하는데다 연체율도 무려 14.3%에

저축銀 PF대출 연체율 무려 14.3% 달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낮아 자본확충 나서

달한다. 저축은행들은 PF 대출 가운데 사업성이 뛰어난 것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금을 회수하거나 손실처리하고 있다. 신규 PF 대출에 대해 몸을 사리는 오래다.

보험회사들도 주식·채권 등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 하락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자 서둘러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더 깎아라”... 은행권 연봉삭감 공포

금감원 '최고 30%' 가이드라인... 임금역전도 우려

은행권이 다시 연봉 삭감 공포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각 은행에 전달한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은행 임원의 연봉삭감률은 10~30%로 제시됐다.

앞서 각 은행은 임원 연봉의 10~20%를 깎겠다는 자구책을 정부에 제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이보다 큰 폭이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이 강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압박이 아니냐”고 풀이한다.

임원 연봉을 최고 30% 삭감하면 일부 은행에서는 임원급과 부장급의 임금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A은행 본부장(이사 대우)의 기본연봉은 1억3000만원 수준. 지점장(부장) 연봉이 1억10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30%가 깎이면 임금수준은 단번에 뒤바뀐다.

이 은행 관계자는 “본부장의 경우 비록 30%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 내놓은 삭감률에 따라 임금을 줄이면 부장급보다 1000만~2000만원 많지만 1년 계약직이라는 리스크상 앞으로 누가 본부장이 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에서는 일선 지점장들이 몸을 사린다는 전언이다. 삭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임원 연봉이 줄어들면 그 여파가 아래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작 금융당국이나 한국은행, 정부의 연봉은 삭감하지 않으면서 시중은행만 몰아세운다는 불만도 심심찮게 들린다.

한편 은행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계획을 작성해 10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쯤 해당 은행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권화순·이새누리 기자 hstree@

머니투데이

금감원 “은행 배당 최대한 자제해야”

“배당성향 5%P 낮추면 BIS 0.27%P 올라”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금융당국의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올 연말 배당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상증자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9일 “3분기 주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 만큼 은행들이 자본확충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평균적으로 은행들이 배당성향을 5%포인트 낮추면 자기자본비율을 0.27%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당성향은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당성향을 낮추면 그만큼 자본이 늘어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은행들이 과도한 배당을 해왔지만 올해는 수익성도 좋지 않은 만큼 배당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하려는 노력

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신주 발행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면 증자가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한겨레신문

저축銀 예·적금 지난달 1兆3,000억 몰려

전달비해 5배이상 늘어나

지난 10월 중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에 무려 1조3,000억원 이상의 시중 유동자금이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저축은행들의 총수신은 58조 5,000억원으로 9월 말에 비해 1조 3,383억원 증가했다.

이는 9월의 수신 증가액(2,336억원)보다는 5배 이상, 올해 3월부터 9월까지의 월 평균 증가액(5,106억원)과 비

교하면 두배 이상 많은 것이다.

금융원은 9월 중순 이후 저축은행의 8%대 고금리 특판예금 판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자들의 예금 선호 현상 등에 힘입어 대형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많은 시중자금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 1위를 달리는 솔로몬저축은행이 2,401억원을 유치했고 현대스위스와 한국투자저축은행도 각각 1,905억원, 2,101억원의 예·적금을 새로이 끌어들이었다.

이처럼 수신이 크게 늘어난 데 반해 신규 대출 규모는 신용경색 여파로 오히려 감소했다.

10월 말 현재 저축은행들의 총대출금은 54조3,000억원으로 9월 말에 비해 6,424억원 증가했다.

이는 9월 중 신규 대출 규모(6,608억원)나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금액(7,230억원)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이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 시장 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반면 신규 대출은 신중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01법관기자 comeon@sed.co.kr

서울 경제

주택건설 수주 7년만에 최악

3분기 9조8천억...작년 4분기의 30%수준

지난 3분기 국내 건축 수주액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 가운데 주택 수주액은 7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국내 건축 수주액은 9조8982억원으로 작년 3분기의 15조8575억원에 비해 37.6% 감소했다. 분기별 실적으로는 2002년 3분기의 9조 6192억원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밑돌았다.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던 작년 4분기의 3분의 1 수준이다.

최근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1분기 14조3224억원 △2분기 20조1318억원 △3분기 15조8575억원 △4분기 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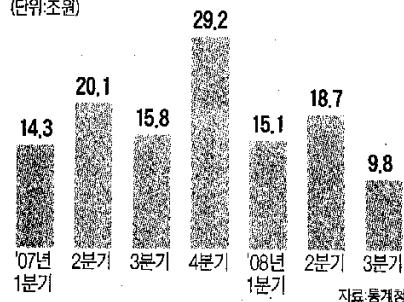
2959억원에 이어 올해는 △1분기 15조 1319억원 △2분기 18조7551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축 수주에는 주택(신규·재건축·재개발)과 사무실 공장 등이 포함된다.

건축 수주액이 이처럼 크게 떨어진 것은 신규 주택과 재개발 등 주택 수주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주택 수주액은 3분기에 5조2589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3.3% 감소했으며 이는 2001년 1분기의 3조879억원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분기별로는 2007년 4분기에 20조624억원으로 정점에 달한 뒤 올해는 1분기 11조

국내 건축 수주액 추이
(단위:조원)



3573억원, 2분기 11조6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주택 가운데 재개발 수주는 3분기에 1조310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조 7125억원보다 64.7% 줄었다. 또 3분기 신규 주택 수주는 작년 3분기 6조8906억원의 절반인 3조3999억원으로 2001년 3분기(3조3880억원) 이후 가장 적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한국 경제

청년 5명중 1명 '사실상 백수'

1999년 이후 최고치 기록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0%를 넘어섰다. 청년 5명 중 1명은 취업 준비를 하거나 놓고 있는 '백수'라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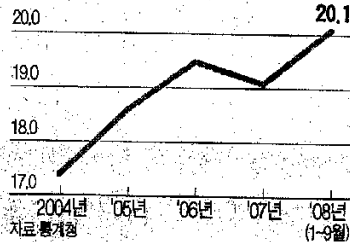
9일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가운데 취업 준비를 하거나 놓고 있는 사람의 수는 지난 1~9월 중 103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0만4000명)에 비해 3만3000명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이 가운데 실업자는 32만명이었고 취업준비자는 47만1000명이었다. 구직 활동을 아예 하지 않아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도 24만6000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실업자와 취업준비자, '쉬었음' 인구를 모두 합쳐 산출하는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1%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

청년층 체감실업률

(%) ※15~29세 기준,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수 합산



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질병 통학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사람만 제외하고 취업가능자들을 대상으로 실업률을 낸 것으로 실질적인 실업률을 추정하는 데는 유효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공식 실업률은 지난 4주간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통계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에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한국경제

오바마노믹스 초점은 '중산층 살리기'

〈Obamanomics·오바마 경제정책〉

● 경제 회생정책 방향은

실업수당 규모·지급 기간 대폭 확대 주장
“美 제조업의 뼈대” 자동차산업 지원 강조

버락 오바마(Obama)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 회생 정책의 최대 강조점을 ‘중산층 살리기’에 두었다.

7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그는 “미국의 실업자가 1000만 명(6.5%) 시대에 접어들어 미국은 우리 생애 최대의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산층부터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실업률은 9월의 6.1%에서 지난달 6.5%로 늘었으며, 오바마 당선자는 “이달 들어 24만 명, 올 들어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가 조속한 시일 안에 경기 부양책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업보험 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보험금은 월 129~541달러 선에서 실직 후 첫 26주만 지급된다. 그러나 26주가 지나서도 일자리를 못 찾는 실업자가 이미 230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오바마 당선자는 이들의 실업수당 규모와 26주인 수혜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도로·교량·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방안 등을 위해 1000억~3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논의 중이다. 하원은 지난달 610억 달러의 제2차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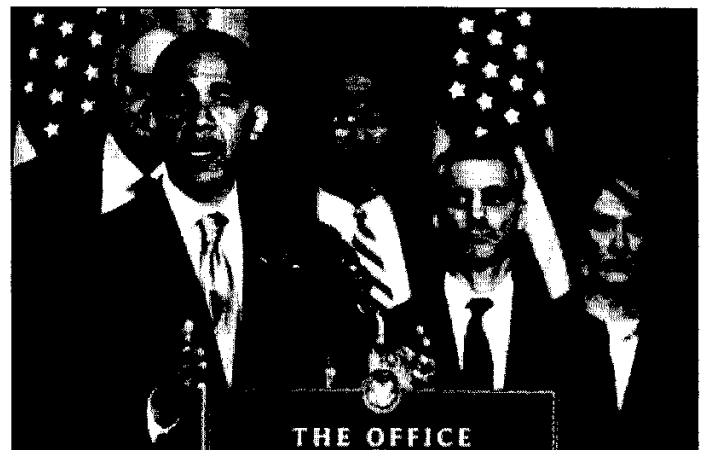
기부양책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공화당과 부시 행정부는 “효과를 보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고,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8일 라디오 연설에서도 의회가 ‘레임덕 회기’에 이 2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 1월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가 자신의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오바마는 또 “금융 위기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이 미국 제조업의 뼈대”라면서 “현행법에서(자동차 산업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 보고, 추가적인 법안이 필요한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Pelosi)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Reid)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8일 자동차 업계와 만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경영난에 처한 자동차 업계에 추가 지원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자는 현 경제 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과 정책 집행은 조지 W 부시(Bush)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정부, 한 명의 대통령이 있다”면서



로이터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7일 시카고에서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미국은 우리 생애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취임 즉시 경제 문제 대처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자의 뒤로 람 이매뉴얼(오른쪽 두 번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 등 참모들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의 경제 해법 방안

신속한 경기부양책 법안 통과

- 민주당은 도로·교량·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방안 등을 위한 1000억~3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의회 통과 추진
- 실업수당 수혜 기간을 현행 26주보다 연장, 실업수당도 상향 조정

자동차 산업 보호 방안 강구

- 자동차 산업의 핵심 주인 미시간 주 제너럴 모터스를 경제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
- 현행법 안에서 지원 방안 검토하고, 추가적 법안이 필요할 경우 입법 지원

중산층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보건·교육 정책 및 세금 감면 추진

- 200여 개의 부시 행정부 정책에 대해 전면 개정 검토

부시 행정부의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현재의 경제 위기나 해결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토니 프라토(Fratto) 대변인은 이날 “오바마 당선자가 오

는 15일 열리는 선진·개도국 모임인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역시 자신의 경제정책이 부시 행정부의 것과는 무관한 것임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워싱턴=최우석 특파원
wschoi@chosun.com



신화통신 뉴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막한 G20(선진 7개국+주요 개도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8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맨 뒷줄 왼쪽 첫 번째가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같은 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맨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이번 회담은 15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렸다.

“내주 워싱턴회담서 큰 틀 합의 뒤 100일내 금융개혁 최종안 확정을”

EU 27개 회원국 정상들 제안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내주 워싱턴 회담 후 100일 이내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혁 최종안을 확정 짓고 실행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G20(선진국과 주요 개발도상국 모임) 워싱턴 회담을 앞두고, EU 차원 공동 요구안을 도출하기 위해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EU 순회 의장인 프랑스 사르코지

(Sarkozy)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회담에서 금융개혁 방향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100일 이내에 2차 정상회담을 가지고 세부사항까지 확정 짓자”고 제안했다.

EU의 이번 제안은 정권교체를 맞은 미국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오바마(Obama) 차기 미 대통령이 참석하는 2차 세계 정상회담을 통해 개혁안을 확정 짓고 글로벌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자는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 “글로벌 시장관리자로서 IMF(국제통화기금)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

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유럽 정상들은 또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펼치자”는 영국 고든 브라운(Brown) 총리의 제안을 ‘유럽공동 요구안’의 하나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세부 사항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 ▲조세파난처 및 헤지펀드 활동 규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은행 자산평가 회계규칙 재검토 ▲금융회사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제 방안도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파리=김홍수 특파원 hongsu@chosun.com

G20, 추가 금리인하 공조 논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9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추가 금리인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신흥국 대표들은 G8(주요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등 G8 국가 외에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EU)의장국 등 20개 회원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신재윤 차관보가 참석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현재의 세계 금융시스템은 마치 카드로 쌓은 성처럼 무너져 버렸다”며 “투기자본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8일(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과 한국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이 참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와 G20 역할 제고 방안 등을 협의했다. /상파울루해협뉴스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캐나다의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능가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조율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국 중앙은행이 지난 6일 1.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하

는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단독 혹은 공조 아래 수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 현실화의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BRICS) 4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대표단은 회담 하루 전인 지난 7일 별도 모임을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들

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회의에선 세계 금융시장 규제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초국가적인 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AIG, 2개월만에 추가 구제금융 요청

美 정부에 모기지담보증권 매입 등 포함

지난 9월 미 정부로부터 850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은 AIG가 채 2개월도 안 돼 또다시 정부에 새로운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전날 밤 AIG의 임원진이 정부 관계자들과 협상을 벌였다면서 AIG가 요청하는 내용에는 채무-지분 교환이나 정부의 모기지담보증권(MBS) 매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내지 못한 채 무산될지도 모르지만, AIG 측은 10일 3·4분기 실적 발표 전 결론을 내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AIG 이사회는 9일 회의를 열어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협상은 AIG가 예초 지원받은 850억달러에 이어 2차로 받은 375억달러의 자금을 빠르게 소진, 자금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열린 것이다.

AIG는 최근까지 총 1,225억달러의 유동성 자금 중 이미 810억달러를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초 시한인 2010년 이전에 조

기 상환하려는 노력도 금융위기와 자산가치 하락, 신용경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AIG 측은 그동안 정부가 지원한 자금의 금리(리보+8.5%)가 너무 높아 회사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따라서 AIG는 정부 대출을 교체하는 방안은 희망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고 대출 상환기간도 현재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월가에서는 AIG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이 신속히 소진되는 반면 회사의 재정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부정회계 의혹 등이 제기됐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한국경제

2008년 11월 10일 월요일 A01면

中, 경기부양에 800조원 투입

2010년까지 SOC 등에 투자...내수진작 위해 특단 조치

중국정부 웹사이트 통해 발표

중국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4조 위안(약 800조원)을 투입,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도로·항만·철도는 물론 농촌기반시설 건설 등에 자금을 대량으로 쏟아붓는 '차이나판 뉴딜정책'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기사 A3면

중국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책을 실시한다고 9일 저녁 발표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지난 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고 보도

했다. 투자자금은 기간시설 확충과 사회복지시설 건설 등에 주로 쓰이게 된다. 중국 당국은 올해 안에 건설부분에 1000억위안(20조원)을 우선 투입한 뒤 내년 지진피해 재건 등에 200억위안(4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초과 재정지출로 수혜가 예상되는 부문은 주택과 농촌 기반시설, 교통 인프라, 환경보호, 기술혁신 등이다. 중국은 이와 함께 완화된 금융정책을 시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중국정부는 아울러 중장기적인 경기부양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0년까지 철도 건설에 2조위안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데 2조 1000억위안, 항만 건설 등에 9000억위안을 집어넣을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대 8000억위안(160조원) 규모의 중시안정기금 마련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대표적 관공단체인 사회과학연구원(중시안정기금을 조성, 추가의 추가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또 중국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연쇄도산

을 막기 위해 수출세 환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정부는 지난달 말 전체 수출상품의 25%에 달하는 3000여개 품목에 대해 수출환급세를 인상했다.

중국정부가 이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 5년 중 가장 낮은 9.0%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최저 5% 선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中, 800조원 '초대형 프로젝트' 발표

“내수 살려 경착륙 막자” ‘차이나판 뉴딜정책’ 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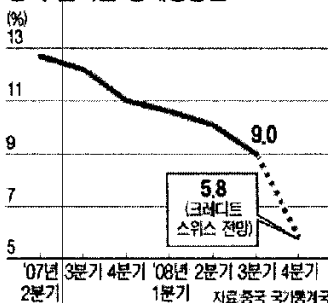
세쉬런 중국 재정부장(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 출장길에 올랐다가 중도에 급거 귀국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G20 회담 참석에 앞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 회담을 위해 지난 5일 베이징에서 3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페루에 발을 디딘 지 몇 시간 뒤 다시 32시간의 귀국길에 오른 것이다. 글라디스 오테로 스윈던 APEC 회담 의장은 “세 장관이 ‘돌아와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때부터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증폭됐다.

중국이 9일 4조위안(약 800조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경기 하강 속도가 가팔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둥성에서만 7000개가 넘는 수출기업들이 지난 10월 이후 파산하는 등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연쇄도산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치루이자동차 등 대형 자동차업체들이 줄줄이 감원에 나서는가 하면 실직자들의 집단시위가 확산되는 등 사회적 불안도 높아지고 있는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상황이다.

도이체방크의 마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올해 9.8%에서 내년에는 최저 6% 안팎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중국의 4분기 성장률이 5.8%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크레디리요네증권(CLSA)도 4분기 성장률이 6.5%로 둔화되고 내년엔 5.5%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포브스 인터넷판에 기고한 ‘중국의 경착륙?’이란 글을 통해 “그동안 세계경제를 움직여온 소비와 생산부문의 양대 엔진 가운데 미국

(소비)은 사실상 정지했고 중국(생산)도 멈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성장률이 7%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은 (사회 안정을 위해) 매년 2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9~10%의 고성장이 필요하지만 현 상태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주택과 농촌 기반시설, 교통 인프라 분야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프라 발전이 그만큼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또 완화된 금융정책을 시행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업들의 자금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에 발표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외에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과감한 감세안 등이 또다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주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내수시장을 육성해 중국이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오경진 기자

forest@hankyung.com

中 160조원 증안기금 조성 검토

연말 반등 가능성 커져

글로벌 금융위기와 3분기 실적 악화로 추락을 계속한 중국 증시가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발판으로 반등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중국 증권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해 6000억~8000억위안(약 160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국영기업 증시 수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비유통주 매각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조용찬 한화증권 중국분석팀장은 “지난주 중국 증시가 요동친 데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정책과 함께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금융연구중심이 보고한 증시안정기금 설치 추진방안도 한몫했다”면서 “연말까지 중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되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 3분기 이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업종 대표주들을 중심으로 전일 대비

1.75% 오른 1747.71을 기록하며 1700선 저점을 찍고 올라섰다. 홍콩 H지수도 2.96% 뛰어 6794.59로 상승했다.

조 팀장은 “유통주 시가총액(3조8126억위안) 대비 증시안정기금은 많아야 21%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수혜주와 업종 상위 종목, 비유통주 해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던 주식을 위주로 하락 속도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개인소비 모멘텀이 사라지기 전에 하루빨리 시장의 추가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 때문에 중앙경제업무회의가 열리는 이달 말 이후로 안정기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정기금 설치를 건의한 중국사회과학원은 “기금 설치로 상하이종합지수 1500 이상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적이 양호한 50개 이상의 블루칩을 조건 없이 매입해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지지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중국 증시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최소한 상하이지수를 1800선으로 올려놓고 올해를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내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8%대 진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는 H지수도 미국 대선으로 인한 새로운 리더십의 경제정책과 글로벌 긴급 금융구제 방안에 대한 기대로 8000선까지는 회복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많다.

허재환 대우증권 연구원은 “현재 중국 증시가 워낙 저점이라 연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 인프라 스트럭처 부문에 한정된 부양책으로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체적인 시장 방향을 바꿔놓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장 수출기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장기업 이익의 50~60%를 차지하는 은행주 4분기 실적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도 연말 중국 증시의 발목을 잡을 악재로 꼽힌다.

김정환 기자

크레디트스위스·UBS·도이치은행

“中 내년 7.5%성장”

20년만에 최악 전망

중국의 내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9%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로 수출 전망이 어둡고 정부의 내수부양 정책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와 UBS, 도이치은행은 내년 중국의 성장률을 7.5%로 예상했다. 1990년 이후 큰 2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RBS는 더욱 조심스런 전망을 내놴다. 이 은행은 중국이 내년에 8%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보다 크게 낮은 5%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기관들이 이처럼 중국의 성장세를 어둡게 보는 데는 중국 정부의 내수부양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 철도와 도로 등을 확충하고 저소득 가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

중국 내년 성장률 전망

8% RBS(5% 성장 가능성 배제 못해)

7.5% 크레디트스위스 UBS 도이치은행

7.3% 차이나인터내셔널캐피탈

임이 없다는 것이다.

베이징에 있는 차이나인터내셔널캐피탈의 하지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내수부양 재정지출이 제때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내년 성장률은 7.3%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콩 소재 맥쿼리증권의 폴 캐비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면서 “경기상황이 꽤 뚜렷이 둔화되는 모습이며 6개월 후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재정집행이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지난 3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9.9%였으며 지난해 세계경제성장률에서 중국 성장률이 차지한 비율은 27%에 달했다.

김유림 기자 kyr@

매 일 경 제

머니투데이

줄줄이 나올 실물지표에 주목

이번주 증시 전망

이번주 증시의 최대 변수는 역시 실물경기 관련 지표들이다. 또 주말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과 주중 발표될 중국의 각종 경제 성적표, 중국 당국의 대규모 증시안정기금 검토도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시장은 잇단 외환유동성 확충과 추가 금리 인하 등으로 지난 주부터 서서히 안정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난 7일 달러당 원화값이 13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역시 5.69%까지 급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반면 실물경제지표는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7일 발표된 10월 미국 실업률은 6.5%로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날 발표된 독일 9월 산업생산 역시 8월에 비해 3.6% 감소해 1995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이날 미국 다우지수가 2.8

이번주 증시 주요 일정

날짜	주요 일정
10일	중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
11일	중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12일	중국 10월 소매판매지수 MSCI 회장 한국 방문
13일	미국 9월 무역수지
14일	미국 10월 소매판매지수
15일	G20 회의 개최

5% 상승하는 등 증시 급락은 멈췄지만 악화되고 있는 실물경제지표는 증시 추가 상승을 제한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주 시장의 관심은 경기 둔화에 대한 각국의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말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근 각국 정부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공동 대응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또 한번 정책 공조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국 실물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상보다 빨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박종보 하나대투증권 연구원

은 “미국 민주당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주중 미국 정책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증시에 호재가 될 만한 변수”라고 말했다. 줄줄이 발표될 중국의 10월 경제 지표도 관심거리다.

10일 생산자물가지수를 시작으로 11일 소비자물가지수, 12일 소매판매지수가 연이어 발표된다. 14일 발표될 미국 소매판매지수와 유럽 GDP성장률도 글로벌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다.

역시 우려되는 점은 악화된 수급문제다. 연금금 매수세가 10월만큼 강하지 않은 데다 외국인 매도세도 쉽사리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파트장은 “지난 10월 폭락 쇼크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조금만 나쁜 지표가 나올 경우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지수 바닥은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선엽 굿모닝 신한증권 연구원은 “주 초반 숏 고르기 장세를 보인 이후 주 중반 이후부터 G20 회담에 대한 기대로 반등 시도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 일 경 제

도쿄증시 외국기업수 23년來 최저

연말까지 19개로 줄어들듯

올 신규상장은 한건도 없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수가 올해 말까지 19개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는 1985년 이래 2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올해 외국 기업의 신규 상장 역시 한 건도 없었다.

신규 상장 실적이 없는 것은 닛케이

평균주가가 급락했던 2003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 기업의 유치에 주력해왔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장 폐지 방침을 결정한 외국 기업은 영국의 대형 은행인 바클레이스와 미국의 보잉, 독일 제약사인 바이엘 등 6개사다.

니혼게이지가 신문은 그동안 기업 합

병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기업이 아예 철수하면서 상장을 폐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중국, 동남아 등지에 담당자를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 증시 상장을 위해서는 신규 상장료가 필요한데 일본어로 계획서를 만들고 별도의 감사료를 내야 하는 등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

전문가들은 증권의 기반 약화를 막기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

서울 경제

“美·유럽 실업률 8% 경고” 내년 고용전망 최악

지구촌에 불어닥친 ‘불황’ 돈줄 풀어 막는다

【뉴욕=정지원특파원】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마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흑독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축소와 금리 상승 등 간헐적재정정책에 몰두하던 각국 정부가 이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큰 폭의 금리인하 등 확대 재정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경제 위기를 맞아 이들을 극복하기 위한 세계 각국들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

IMF “내년 성장을 2.3%”… 각국 앞다퉈 금리인하 “시장만 믿다 경제 망쳤다” 규제강화로 체질개선

■세계 경제, ‘빛’내서 잔치

조리에 조리를 붙고 터져나오는 등 약재들로 세계 경제는 지난 10년의 호황을 뒤로 하고 깊은 침체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현지시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 발표를 통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2%로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질 경우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로 간주된다. 특히 선진 경제권인 미국과 일본, 유럽 경제가 각각 0.7%와 0.2%, 0.5%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재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부채와 차입에 의존한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와 과도한 유동성으로 세계 경제의 펀더멘털이 급격히 악화돼 왔던 것이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요국 정부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등 강력한 유동성 축소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세계화의 ‘역풍’을 맞다

고성장을 기록하며 질주하던 세계 경제는 각국 정부의 긴축기조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등 난관에 부딪히면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결정타는 미국 월스트리트발 ‘금융 위기’였다.

책임감이 결여된 지난한 ‘자유’를 누리오던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 하나 둘씩 파산하면서 금융세터의 위기는 ‘파인스트리트(실물경제)’까지 전염될

기색이 완연하다.

자금시장이 얼어붙으며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며 이로 인해 고용시장마저 흔들리는 등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고용악화는 심각하다. 미국의 실업률은 2년 만에 최대치인 6.5%로 치솟은 상태이며 유럽의 실업률은 7%대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용시장 악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 모두 실업률이 내년 최대 8%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선진 경제권의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의 ‘동력’이라고 불리던 신흥시장들의 성장세

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세계화를 통해 호황을 함께 누리던 세계 경제가 이번에는 동반 침체로 ‘세계화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돈줄 풀고 나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손을 잡고 위기 해소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경기부양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금리인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최대 2000억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날 사상 최대 규모인 26조엔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중국도 최대 7억위안에 달하는 중국판 ‘뉴딜정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의 650억달러 부양책을 필두로한 유럽지역의 경기부양 의지도 고조되고 있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 불결도 계속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6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3.75%에서 3.2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한달 새 두차례 1%포인트에 달하는 금리인하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이날 기준금리를 무려 1.5%포인트나 인하하며 지난 1955년 이후 최저치인 3%로 끌어내렸다. 일본은행(BOJ)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지난날 각각 0.25%포인트

와 0.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특히 BOJ의 경우 7년7개월 만에 금리인하였다.

■세계 경제, 지금 ‘체질개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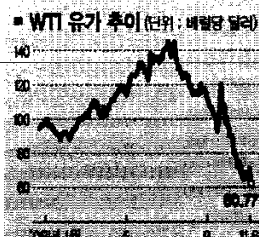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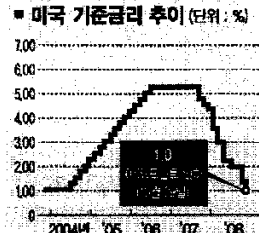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의 펀더멘털과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체질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영국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시장 과잉”을 증식할 강력한 국제 규제가 수반돼야 한다”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토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주요 13개국(G13) 재무장관회의의 강화와 IMF의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등 구체적인 규제·감독 방향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영국의 경우 정부의 규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의 보수한도 제한 등 경영에 적극 개입할 것을 발표했으며 미국에서는 새 감독기관을 설립해 파생금융상품과 헤지펀드, 금융기관 경영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감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 개편을 위해 ‘신 브레튼우즈 체제’의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신 브레튼우즈 체제와 관련 ▲국제표준의 새 회계기준 채택을 통한 투명성 확보 ▲국가별로 이뤄지는 현행 금융 감독 체제의 개혁 ▲IMF 감독 기능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burg2@fnnews.com



심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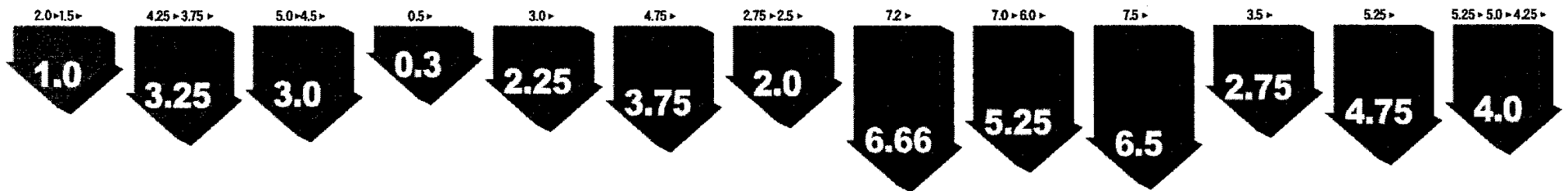
美·EU·日 “금리 낮춰 경제 살리자” 제로 금리 시대 돌입

<0>

제로(0) 금리 시대로 가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실물경제 침체 위기에 놓인 세계 주요국들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일제히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글로벌 실질금리 수준이 머지않아 제로에 근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주 영국 중앙은행은 역대 최대인 1.5%포인트, 유럽중앙은행도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미국과 일본의 실질금리는 이미 제로 금리에 바짝 다가섰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 우리나라도 지

난 한 달 새 금리를 1.25%포인트나 파격 인하하며 저금리 시대로 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핵심 공조 방안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 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미국·일본·유럽이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연 제로 금리가 심장이 식어가고 있는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소생술이 될 수 있을까.

10월 이후 본격화된 세계 주요국 정책금리 하락세 10월 1일~11월 7일 기준, 단위:연 %



●부작용 없나 저금리 ‘마약’ 빠져 구조조정 게을리하면 장기침체 풀린 돈 때문에 부동산·증시 2차 버블 만들 수도

제로(0)금리 또는 초저금리는 시중 자금난을 일시적으로 덜 수 있는 응급조치일 뿐 실물경제 침체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긴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히려 저금리란 ‘마약’에 빠져 기업과 은행이 구조조정을 게을리할 경우 세계 경제를 장기 침체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다. 최근의 글로벌 금리인하 추세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금리를 낮춰도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장기 불황을 겪을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제로금리의 부작용은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터지자, 경기를 살리기 위해 1990년부터 1995년 7월까지 금리를 무려 9차례나 인하여 6%대이던 금리를 0.5%까지 내려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낮은 대출금리는 경쟁력 없는 한계 기업들의 생존 기간을 늘리고 은행 구조조정을 늦추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 국민들은 싼 이자 때문에 단기대출을 장기로 전환하면서 가계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도 생겼다. 결국 저금리가 경기침체만 연장시킨 것이다.

또한 초저금리나 제로금리는 신용

경색이란 급한 불을 끄더라도, 그 뒤에는 통화량 증가로 인한 또 다른 버블을 겪을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연구원은 “위기 극복을 위해 풀 돈이 다시 전세계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2차 버블을 만들 수 있다”며 “이후 세계는 버블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익준 기자 joyjune@chosun.com

美

금리 1%로 역사상 최저... 0%대 시간 문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이 앞장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연 1%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머지않아 0%대로 내려가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지난 14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연 5.75%이던 기준금리가

자산 디플레 차단 나서

연 1%로 주저앉았다. FRB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미국은 일본처럼 기준금리가 0%대로 낮아진다.

미국은 소비심리부터 제조업 생산 및 소매 판매, 주택 경기, 실업수당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 경고등(燈)이 켜진 상태다. 주택가격이 추가로 폭락하고 주식시장 붕괴가 지속되면, 대공황 이래 초유의 자산가격 디플레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벤 버냉키 FRB 의장이 언급한대로 중앙은행이 통화발행을 급격히 증대시켜 자산 디플레 차단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크 거틀러 뉴욕대 교수는 "결국 현재 이슈는 경기후퇴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신용경색이 심화되면 FRB가 내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0%까지 인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박종세
특파원 jspark@chosun.com

EU

英, 한번에 1.5%p 내렸지만 시장은 '시큰둥'

최근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 각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실물경제 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긴급대응이다. 특히 지난주 영국의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폭적인 금리 인하(1.5%포인트)를 단행한 것이 충격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과격적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요국 주가가 5% 이상 급락하는 등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EU, 내년 성장률 0.1%"

10월 이후 유럽 각국에선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20~40%까지 격감하는 등 소비침체가 예상보다 빨리, 훨씬 깊은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9월 중 독일 기업들의 해외신규 주문이 전월 대비 11%나 격감했다는 소식은 향후 유럽 경제가 이중고(내수침체+수출감소)를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적 지표로 해석됐다. 유럽연합(EU)은 내년 유로존(유로

화블 사용하는 15개국)의 경제성장률이 0.1%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라별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성장률이 0%로 추락하고, 영국(-1.0%), 스페인(-0.2%)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이 내년엔 금리를 연 2.0%(현재 연 3.25%)까지 내리는 등 유럽 각국의 공격적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파리=김홍수 특파원
hangsu@chosun.com

日

0.2%p 내려 0.3%... '제로 금리'로 복귀할 듯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인하한 것에 비하면 움직임이 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인하폭도 0.2%포인트에 그쳤다.

하지만 이것은 최근 현상일 뿐, 크게 보면 미국과 유럽이 일본의 초저(超低) 금리 수준에 수렴해 들어가는 모습이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역설적으로 일본이 가장 '선제

미·유럽 내리면 또 인하

적'이었던 셈이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연 0.3%에 불과하다. 인하 전에도 연 0.5%였다. 일본의 저금리는 장기 불황과 함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란 일본 경제만의 특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 경제의 위기는 1990년대 일본의 불황 구조(부동산 가격 폭락→금융 위기→실물경제 침체→디플레이션)를 닮아가고 있다.

일본은 2001년 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0.15%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명 '제로(0)금리' 시대를 이어갔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추가 인하해 다시 제로금리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경우, 금리차가 축소돼 현재 일본 경제를 감타하는 일본 엔화 가치의 급등 현상(엔고)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선우정 특파원 su@chosun.com

“위기의 진원지 월가, 대대적 수술 나설것”

인터뷰/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경제학 교수

제임스 갤브레이스 미국 텍사스대 경제학 교수는 8일 “차기 오바마 정부는 시장의 개입을 늘리는 큰 정부로 갈 것”이라며 “특히 케 이먼군도 등 조세회피지역에서 수익을 세탁하는 미 기업들에 대한 단속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자본주의’, ‘대폭락 1929’, ‘풍요로운 사회’ 등의 저자이자 세계적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아들로 이번 대선과정에서 오바마 후보의 경제자문역으로 활동해온 대표적인 진보주의 경제학자다. 갤브레이스로부터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해 들어봤다.

▶ 오바마 당선인의 과제는 무엇인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금융권을 부분국유화하기로 결정했다. 오바마 정부는 주택시장을 하류속히 안정시켜야 하고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 연금과 줄여든 노년층 보호도 시급하다.”

▶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가 퇴장할 것으로 보나.

“매우 빠르게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 부시 정부는 이미 금융권을 부분국유화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란 얘기는 잘못된 개념이다. 시장은 정부의 관리를 안에서 존재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당연히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해 실패를 바로잡아 시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시장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항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시장개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시장을 망쳐왔다.”

▶ 시장실패가 부시 정부의 실패란 얘기인가.

“그렇다. 밀리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가까운 부시 행정부 시대에서 나타나듯 전형적인 정부 실패다.”

▶ 오바마 당선인은 느슨한 월가 감독과 규제를 비난해 왔는데.

“향후 아주 광범위한 감독과 규제가 가해질 것이다. 과도한 금융권 임원보수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금융사의 적정한 자본 유지, 부분별한 투자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와 같은 위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본다. 대대적인 월가 개혁이 될 것이다. 이는 마땅히 해야 했으나 오랫동안 지체돼온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적절히 금융시장을 통제해 오지 않은 탓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게 역설적이게도 개혁으로 인식될 정도다.”

▶ 부유층에서 세금을 거둬 중산층·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오바마 정부의 세금정책이 성공할 것인가.

“잘 짜여진 정책이다.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부의 재분배라고

시장실패때 정부 나서는건 당연

금융권 고임금·투자행태 감독 강화

美기업 조세회피 철저히 단속할 듯

‘그린정책’ 산업계 판도 변화 예고

했는데 부시 정부도 지난 8년 동안 부의 재분배를 추진해 왔다. 많은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소수의 사람에게 혜택을 줬다.”

▶ 오바마 당선인은 법인세율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추세와 역행하는 것 아닌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조세회피(조세회피) 지역으로 물리는 기업들의 행태다. 미 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익 중 상당한 부분을 케이먼군도 등 해외로 세탁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이런 세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차기 정부가 부담할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구제금융까지 감안한 것인데 그건 잘못된 계산이다. 구제금융은 정부가 금융권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일종의 출자전환이다. 재정적자 문제는 이런 각도에서 봐야 한다. 미 정부는 국채를 발행, 장기자금을 조달해 왔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4.3%의 금리로 말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59년 12월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 정부의 신용도는 문제가 없다. 대규모의 달러 유동성 공급이 달러 약세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그렇지 않다고 본다.”

▶ 오바마 정부의 그린에너지 정책이 미국 산업지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에너지 소비와 관련 기술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 창출 효과도 클 것이다. 부시 행정부 역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일관성이 없어 성과를 못 냈다. 국민들의 변화 열망을 잘 알고 있는 오바마는 다를 것이다. 당선인은 새로운 뉴딜정책을 전개하면서 부처와 레이건 행정부가 초래한 손상들을 치유할 것이다. 다리 교량 등 인프라 재구축, 사회 안전망의 개선도 절박하다.”

▶ 브레튼우즈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중대한 개혁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각국은 달러를 보유하고 싶어한다. 미국으로선 거기에 바탕을 두고 효과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를 재정비하려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통화시스템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 아시아 통화시스템과 미국 통화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생존력이 있다. EU의 통화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다.”

▶ EU 통화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나.

“유럽중앙은행(ECB) 헌장이나 마스트리히 조약을 보라. 재정적자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통일된 금융시장 감독체제가 결여돼 있다. 누구나 지적하는 사항이다. 금융위기에 정작 더 위험한 쪽은 유럽 시스템이다.”

경기부양·소비회복 해법에 시선집중

월마트·스타벅스 등 소매유통기업 실적 '경기 가늠자' 될듯

미국중시

이번 주에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제 관련 통계가 많지 않은 가운데 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 '빅3'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 대책 등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실업률 상승과 소비 위축 심화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오바마 당선인 측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오바마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공식 취임할 때까지는 자동차 업체들에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동료 의원들이 2차 부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차기 재무부 장관 등을 선임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표하게 할 것으로 월가는 보고 있다.

보간 키젠의 자산운용 전략 담당 이사인 마이클 김스는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좋지 않은지를 따져보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며 "당분간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만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춘 기업들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계

미국 주요 경기지표 발표일정

12일	· 주간 소매 판매지수
13일	· 최초 실업수당 청구 건수 · 9월 무역수지
14일	· 10월 수출 및 수입 가격 · 10월 소매 판매 ·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GM은 지난주 금요일 3분기에 25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운전자금난 때문에 생산라인을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월마트 스타벅스 노르드스트롬 등 소매 유통 기업들의 실적도 경기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13일 실적을 발표하는 월마트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의 3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실적을 발표한 소매 유통업체들의 3분기 실적은 대체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톱슨로이터의 집계에 따르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S&P500 회사의 평균 순이익은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10일, 11일 3분기 실적을 발표

한다.

경제 관련 통계로는 14일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11월 소비자 신뢰지수와 같은 날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10월 소매 판매 현황이 있다. 금융위기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 관련 통계가 더 악화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 118만명의 실업자가 늘어난데다 금융사들의 신용 공여가 급감한 상황에서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경기대 불만감은 기관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로 이어져 이번 주에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될 것이라 전망이 많다.

특히 환매 요구를 받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주식 매도 강도를 높이면 특별한 악재 없이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식 관련 지수가 작전 저전에 접근한 상황에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 중 경기침체 영향을 덜 받을 종목에 대한 발굴 작업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은 '재향군인의 날'로 연방 정부와 은행은 휴무하고 채권시장도 문을 닫는다. 반면 주식시장과 파생상품 및 통화시장은 정상적으로 열린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한국경제

2008년 11월 10일 월요일 A29면

최대 160조원 '증안기금' 조성說 모락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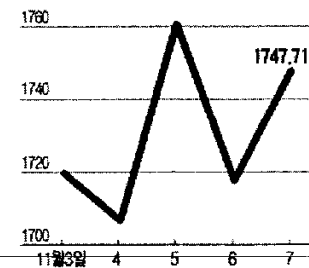
중국중시

중국 증시에 대형 호재가 곧 터질 것이라 소문이 무성하다. 대표적인 게 증시안정기금 조성설이다. 중국의 대표적 관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6000억~8000억위안(약 120조~16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지난 주말 발표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1500선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즉각 증안기금을 통해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대규모 경기부양설이 끊이지 않는다. 이달 말 열리는 경제공작(운용)회의에서 초대형 부양 프로젝트가 발표될 것이라 소문이다. 중국 정부는 약 1000조원을 들여 도로 항만 철도 등을 건설하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치로 4분기에 적어도 250억위안(약 5조원)의 손실이 우려된다. 부동산 기업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하락했지만 4분기엔 더 큰 하락률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고 증안기금이 조성된다면 증시의 분위기는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귀타이증권의 한 연구원은 "비유통주의 유통화물량을 증안기금이 흡수하고 경기부양책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한다면 투자자들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건축안화로 풀린 돈들이 시장으로 들어오면 큰 유통성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국제 원자재 가격 5분의1 토막까지

고철·티타늄 등 80% 폭락
경기전망 어두워 당분간 하락세

국제 원자재시장이 글로벌 실물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였다. 유럽에서 거래되는 고철과 티타늄 가격은 최고 시세에 비해 반 토막이 아니라 5분의1 토막이 났고, 여러 원자재 가격이 반 토막 이하로 추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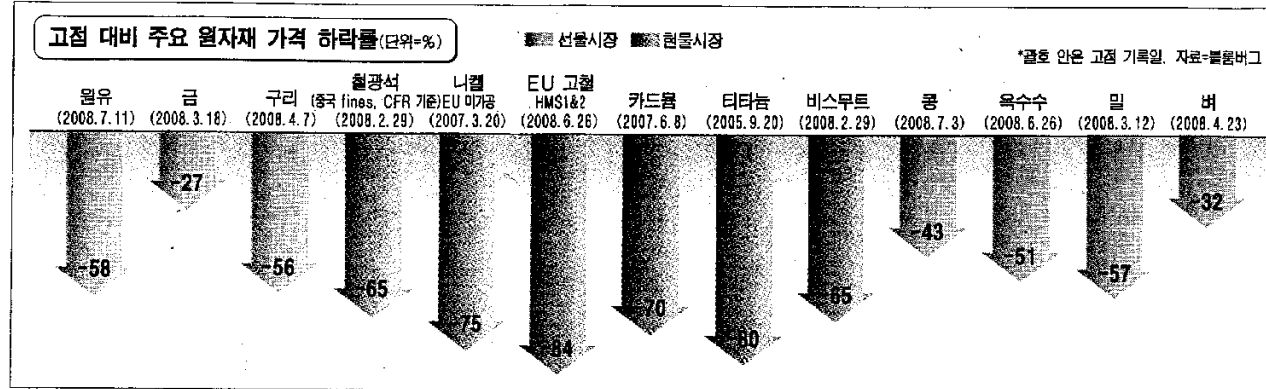
올해 들어 고철 대비 가격이 반 토막 난 종목은 원유와 구리, 옥수수 등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현물 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철광석과 고철, 티타늄 가격은 고철 대비 65~80% 폭락했다.

선물거래소에 편입된 원유(-58%) 금(-27%) 구리(-56%)보다 하락률이 더욱 높아 '자유낙하'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다.

수급에 더 좌우되는 현물 거래 가격이 더 폭락한 것은 그만큼 실물경제 침체 여파가 크다는 증거다.

블룸버그뉴스에 따르면 중국 철광석 가격(운송비 포함)은 지난 2월 29일 t당 197.50달러에서 지난 주 69달러로 65% 급락했다. 유럽연합(EU) 고철(HMS 1&2)은 6월 말 t당 610달러였지만 95달러까지 떨어졌다. 불과 4개월 새 84% 폭락했다.

비철금속 대체재 성격을 띠고 전문적인 수요처가 있는 특수 금속시



장도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티타늄 가격은 2005년 9월 고점인 kg당 27.50달러에서 지난 주 30달러로 80% 폭락했다. 비스무트와 카드뮴 가격도 고철 대비 65%와 70% 폭락했다. 석탄 등 원자재 운임비율 지수화한 발틱드라이지수는 지난 5월 고점 대비 93% 대폭락했다. 전 세계 원자재 물동량이 실물경기 침체 여파로 급감했다는 징후다.

선물거래소 분위기도 현물시장 못지않다.

주요 19개 원자재 품목으로 구성된 CRB로이터스스프레드시트는 7월 2일 고점 473.52에서 7월 25일에

마감하며 47% 가까이 급락했다.

유가는 7일 전날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배럴당 61달러 선에 마감하며 7월 고점 대비 58% 하락했다. 경기 불황에 안전자산 가치를 인정받는 금값만이 3월 고점에 비해 27% 하락하며 최근 경기 침체 여파에 가장 선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룸버그뉴스는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지난달 사상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7일 전했다.

지난달 24개 주요 원자재 종목으로 구성된 S&P GSCI 원자재지수는 28% 폭락했다. 이는 1970년

이후 최악의 수익률이다.

원자재 선물시장에서 빠져나간 지금은 지난달 20억달러에 달했다고 바클레이스캐피털은 밝혔다.

이 가운데 에너지 종목 자금 순유출이 7억5000만달러에 달했으며 농산물과 인덱스 상품에서 각각 5억달러와 5억500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바클레이스는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원자재시장에서 리스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7월을 기점으로 더욱 빨라진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와 달러 강세 속

글로벌 자금 이동을 반영한 것이다.

알각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원자재 밸리에서 보였던 가격 상승 속도보다 최근 하락률이 더욱 빠르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올여름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 반등 기대감이 작지 않았으며 유럽과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7월을 기점으로 이러한 낙관론이 힘을 잃었으며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도 선진국 경기에 동조화 흐름을 보이며 대안투자처로서 구실을 하지 못했다.

특히 미국 10월 실업률이 6.5%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이 더욱 약

화되고 미국 자동차산업마저 정부 지원 없이는 독자 생존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원자재 수요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염려가 강하다.

블룸버그는 한 트레이더 말을 인용해 "철광석이나 고철시장이 곧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차입 투자로 원자재시장에 뛰어 들었던 헤지펀드의 유동성 위기도 원자재 가격 하락 원인이다. 헤지펀드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될 경우 선물시장에 거래되는 원자재 주요 품목 가격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

전문가들은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한 원자재시장이 단기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경기 바닥 신호만 오면 원자재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농산물은 투기세력 투매로 최근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경기나빠진다고 해서 불과 몇 개월 사이 음식 수요가 급감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게 그 이유다. 유가 역시 다시 배럴당 100달러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항휘 기자

“참혹한 현실 아직 남아있어”

최근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기록적인 손실을 본 헤지펀드들이 지난달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두운 전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켓워치는 8일(현지시간)이 편지들을 보면 진혼곡이 배경에 흐르는 듯하다고 보도했다.

헤지펀드리서치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10월 손실이 5.43%를 기록하면서 올들어 손실이 15%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헤지펀드업계의 올해 성적은 업계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90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헤지펀드, 고객들에 편지

헤이만어드바이저의 카일 베이스 이사는 지난달 17일 고객들에

“손실 90년이후 최악
그래도 희망은 있다”

보낸 편지에서 “오늘 어떤 것을 사더라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실업률이 10%에 달하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4~5%가 될 때가 주식을 살 때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금이 주식을 살 때라는 버핏을 비판했다.

바우포스트그룹의 세스 클라만도 지난달 10일자 편지에서 “경기 침체가 더 잔인하고 장기화될 것”이라며 “참혹한 실상이 아직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땅 속 진주 찾기

헤지펀드들은 위기에서도 수익을 내는 투자대상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페리카파탈은 수익률이 15% 넘는 선순위 은행채와 프라임 및 알트A 모기지담보증권에 투자한다. 바우포스트의 클라만은 수익률이 30% 수준인 기업 채권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클라만은 투자서한에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채권 투자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세상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위기에서 씨를 뿌려야 회복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림 기자 kyr@

머니투데이

국제 휘발유값 급락... 원유가보다 싸졌다

배럴당 52.76달러... 두바이유보다 1.05달러 낮아

최근 국제 휘발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제품인 휘발유 값이 원료인 원유 가격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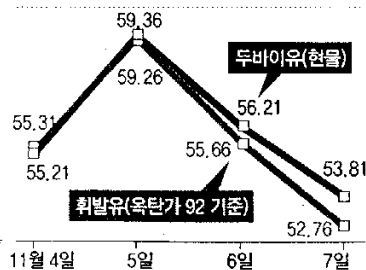
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휘발유(옥탄가 92 기준)는 배럴당 52.7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 가격인 배럴당 53.81달러보다 1.05달러 낮았다.

전날인 6일에도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56.21달러, 휘발유 국제 가격은 55.66달러였다. 경기 침체로 석유제품 수요가 줄면서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7일 영국 런던 석유거래소(ICE)에서 거래된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先物) 가격은 전날보다 0.08달러 떨어진 배럴당 57.35달러로 마감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두바이유·국제 휘발유 가격 추이
(단위: 배럴당 달러) 자료: 한국석유공사



선물 가격은 0.27달러 오른 배럴당 61.04달러로 마감했다. 그러나 개장 전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59.97달러까지 떨어져 세계 3대 주요 유종(油種)이 모두 50달러대에 진입하는 일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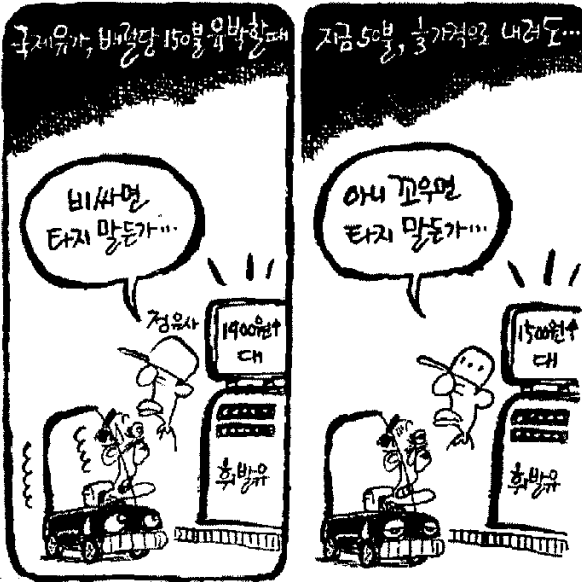
9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61.59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1582.03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장강명 기자 lesomim@donga.com

동아일보

신경부

朝鮮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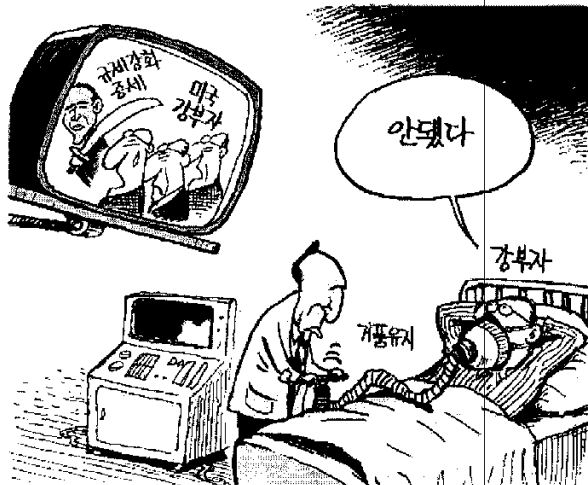
kmshin@chosun.com



김용민의 그림마당
yongmin@kyunghyang.com



한겨레
그림판



장봉군
jang@hani.co.kr

서울만평

백무현 bmh@seoul.co.kr



“기업 부도前에 선제적 구제금융”

黨政 “위기조짐 때 구조조정 촉진 방안 등 검토”

李大統領 “위기확산 막기 위해 단호한 대응”

캐피탈社들 “자금지원 요청”

자동차업계 구조조정 서두른다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악 불황 대비... ‘오바마 압박’ 겹쳐

쌍용 공장 땅 팔고 희망 퇴직 받아

GM대우 신입사원 채용 5년 만에 취소

현대기아 10만 대 감산...합병 통해 감원

장차관 전원 지난달 업무평가

당초 연말실시 계획 앞당겨... ‘대폭 개각’ 사전조치인 듯

총리실서 담당... 지난달 25일께 李大統領에게 결과보고

오바마 “중산층 구제-자동차업계 지원 최우선”

“의회, 취임식 전후해 경기부양책 통과시켜달라”

자영업자 1년새 5만6000명 줄어

오바마 행정부, 北核은 4순위로

경제위기 극복 우선... 이라크, 파키스탄 다음